

# 2020년 서울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 □ 사업개요

- 사업명: 서울 민주시민교육 토론회(온라인)
- 일시: 2020. 9. 18(금) 15:00~17:00
- 장소: 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룸
- 참석대상: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가 20명

## □ 진행 순서

| 시간                   | 내용  | 비고                           |
|----------------------|---|------------------------------|
| 15:00~15:10<br>(10') | [개회], [내·외빈 소개]   | 사회: 임지순<br>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센터장 |
| 15:10~15:20<br>(10') | [축사] <b>서윤기</b> 서울시의회 의원<br><b>오관영</b>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br><b>김희은</b>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                              |
| 15:20~15:25<br>(5')  | [발제·토론자 소개]   | 좌장: 고선규<br>서울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장 |
| 15:25~16:55<br>(30') | [발제]<br>서울시민의 민주시민의식 현황과 과제<br><b>강구섭</b> 전남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br>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쟁점과 과제<br><b>이로미</b>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전임대우교수                        | 각 15분                        |
| 15:55~16:25<br>(30') | [토론] <b>김범수</b>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br><b>노태훈</b> 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장<br><b>이진원</b>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br><b>권혜진</b>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각 7분                         |
| 16:25~16:55<br>(30') | [참석자 질의 및 자유토론]   | 사회                           |
| 16:55~17:00          | [폐회 및 마무리]  |                              |



# 목차

- **발제 1. 서울시민의 민주시민의식 현황과 과제** ..... 1
  - 강구섭, 전남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발제 2.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쟁점과 과제** ..... 51
  - 이로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전임대우교수
  
- **토론 1.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에 대하여** ..... 63
  - 김범수,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 **토론 2.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토론문** ..... 67
  - 노태훈, 전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장
  
- **토론 3. 서울시민의 민주시민의식 현황과 과제** ..... 71
  - 이진원,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토론 4.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 75
  - 권혜진,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 발제 1

# 서울시민의 민주시민의식 현황과 과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강구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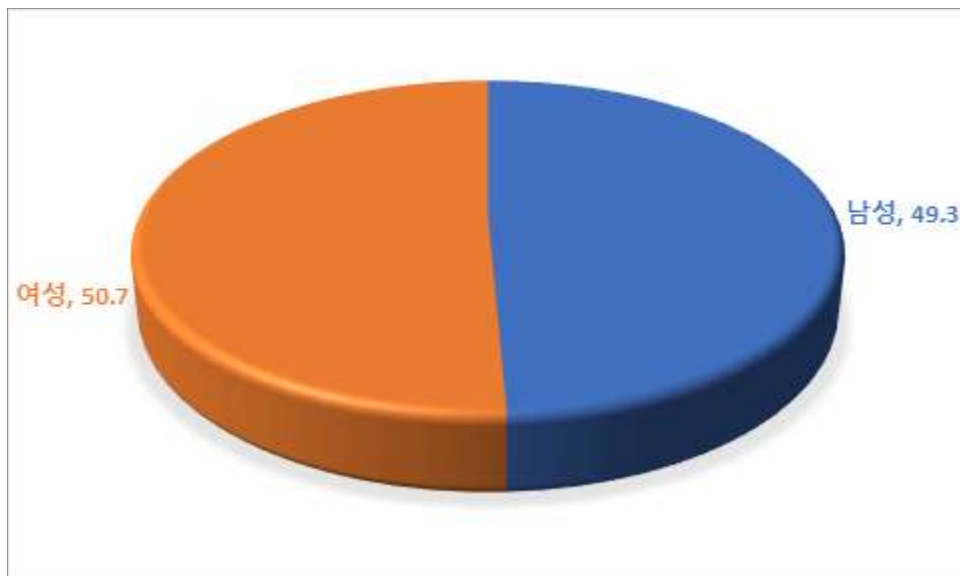
전남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1. 설문조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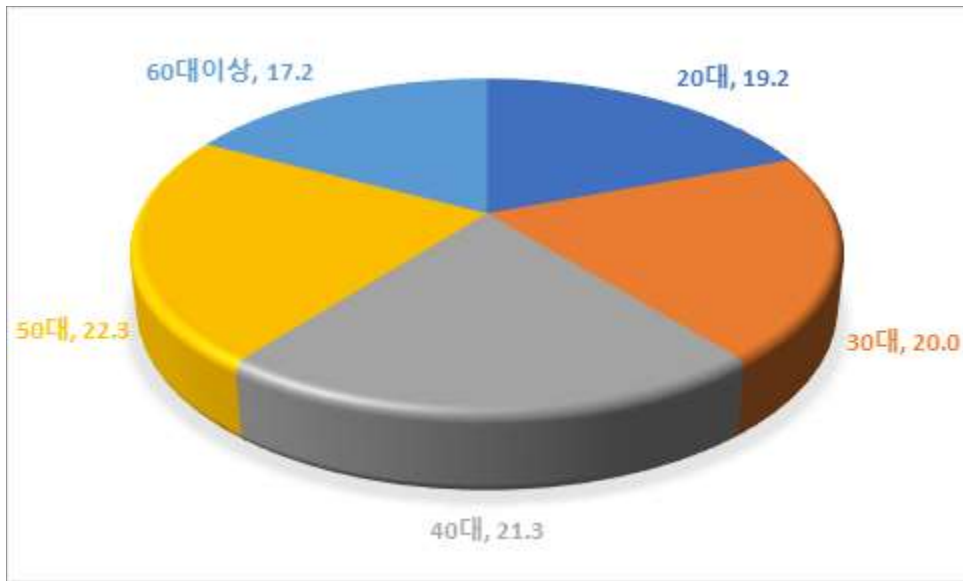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일반 서울시민 1,000명을 무작위로 샘플 추출하였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조사업체(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문항은 민주시민교육 수요조사와 관련된 문항이 16개, 그리고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련된 문항이 7개로 구성되었다.

## 2.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샘플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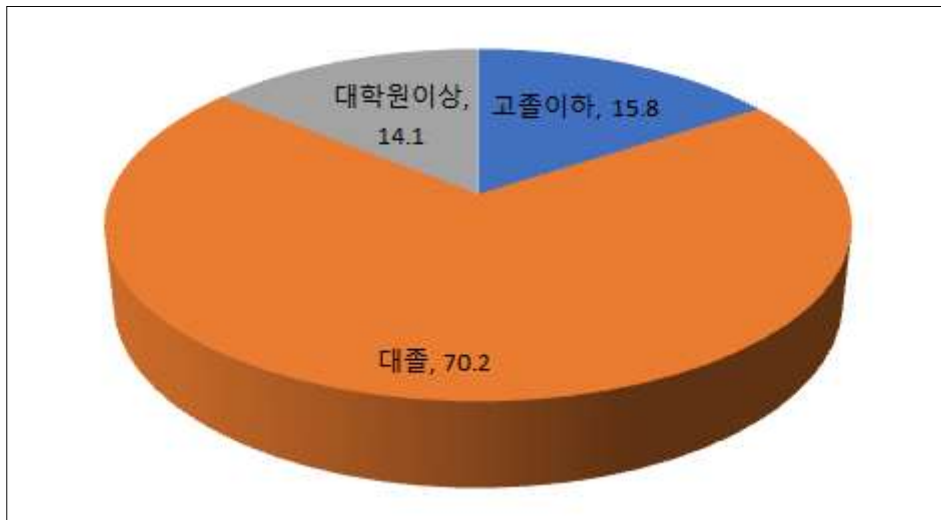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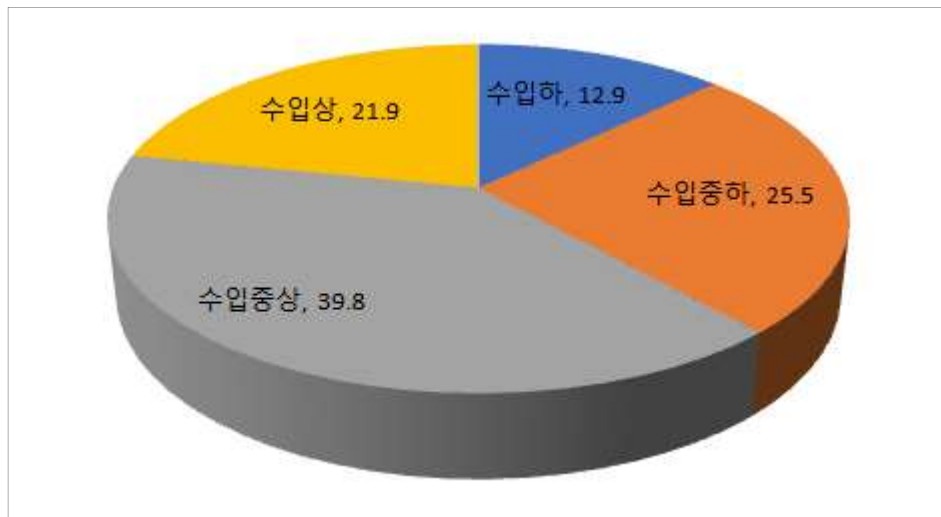
2) 연령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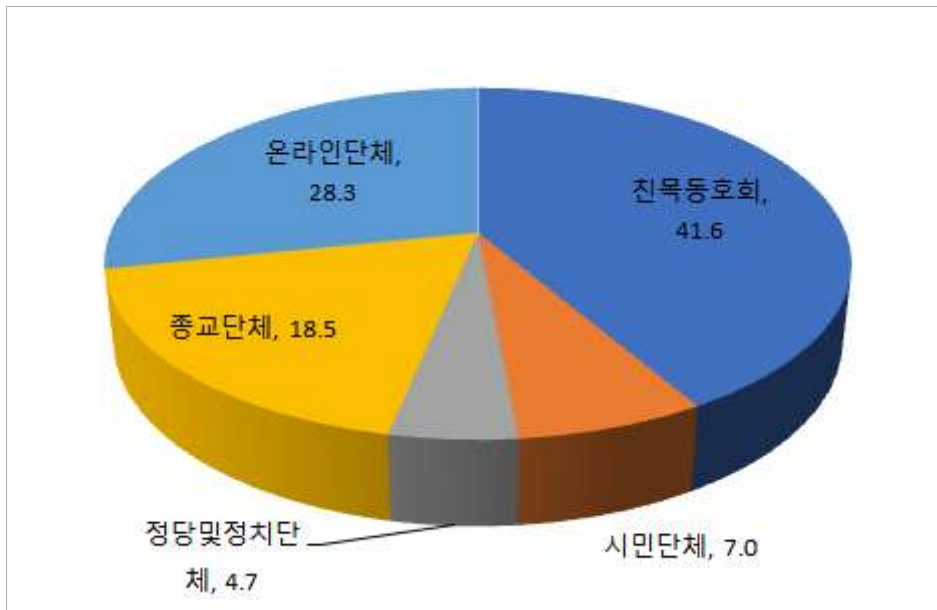
3) 학력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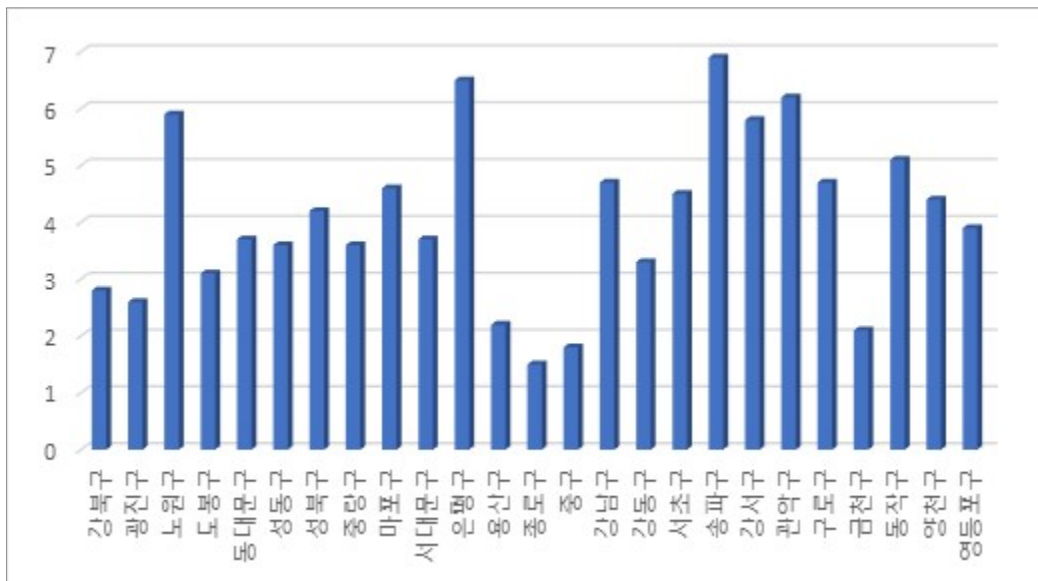
4) 평균수입 분류



### 5) 활동소속 단체 분류



### 6) 거주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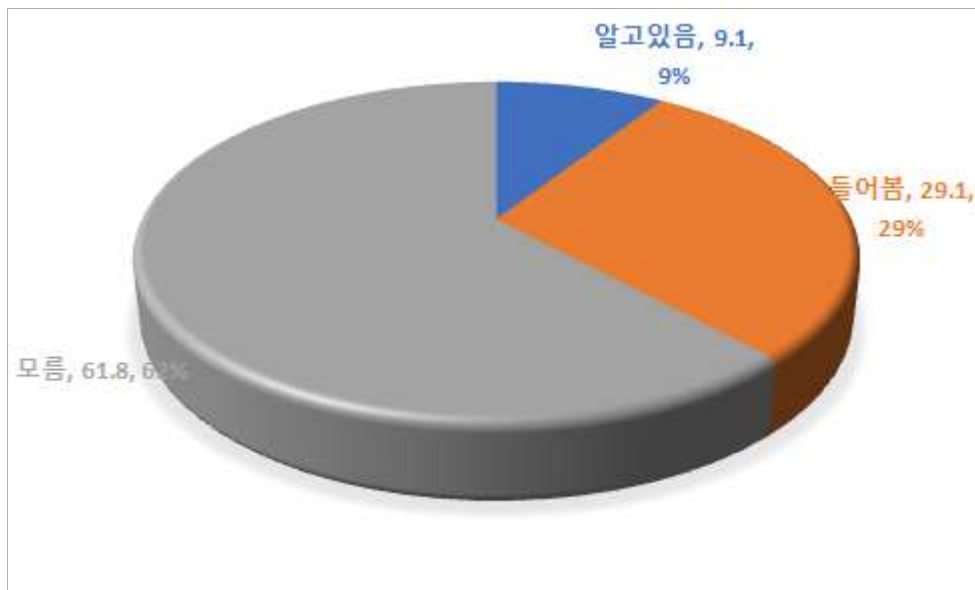
## 3.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

### 1)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지여부

우선,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가 <그림 1>이다. 그림을 보면, 알고 있다고 답변한 시민의 비율은 9.1%이다. 전체 시민 중에서 서울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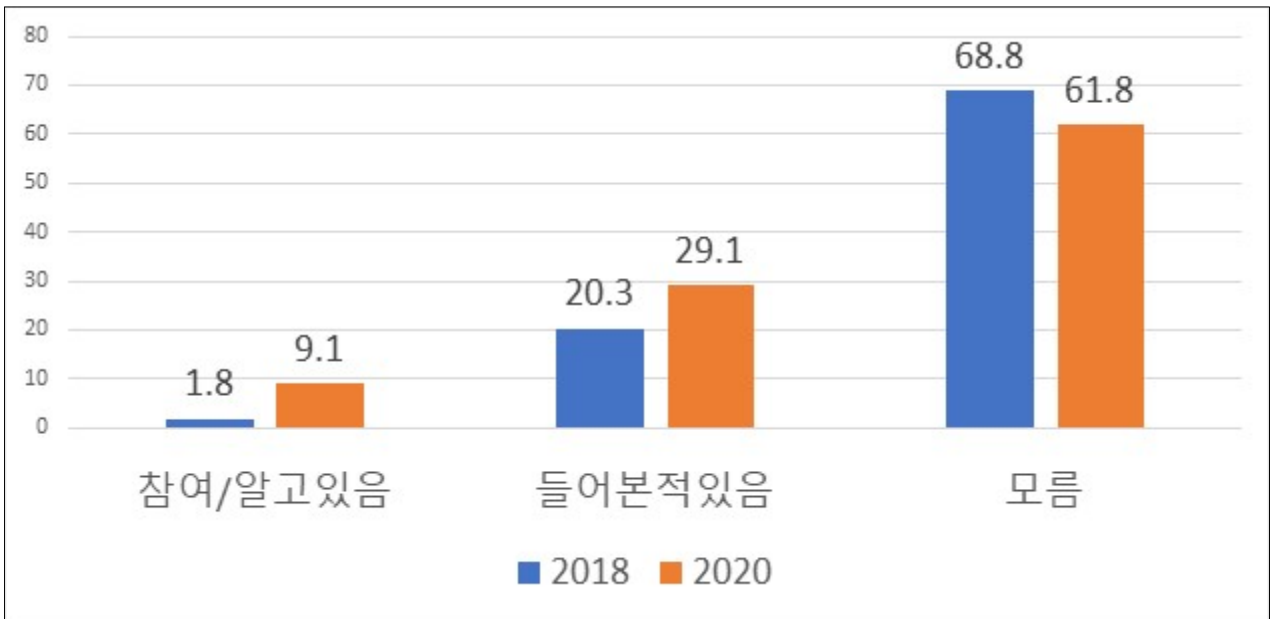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9.1%이다. 결국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 시민의 비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한 비율이 높다.

〈그림 1〉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지여부



그러나 2018년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참여하고 있다는 비율이 1.8%, 2020년 조사에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들의 비율이 9.1%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에서는 20.3%에서 2020년 조사에서는 29.1%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4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른다’는 비율은 68.8%에서 61.8%로 감소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2018년과 비교하여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의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서울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지도 비교



〈표 1〉 서울시민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민주시민교육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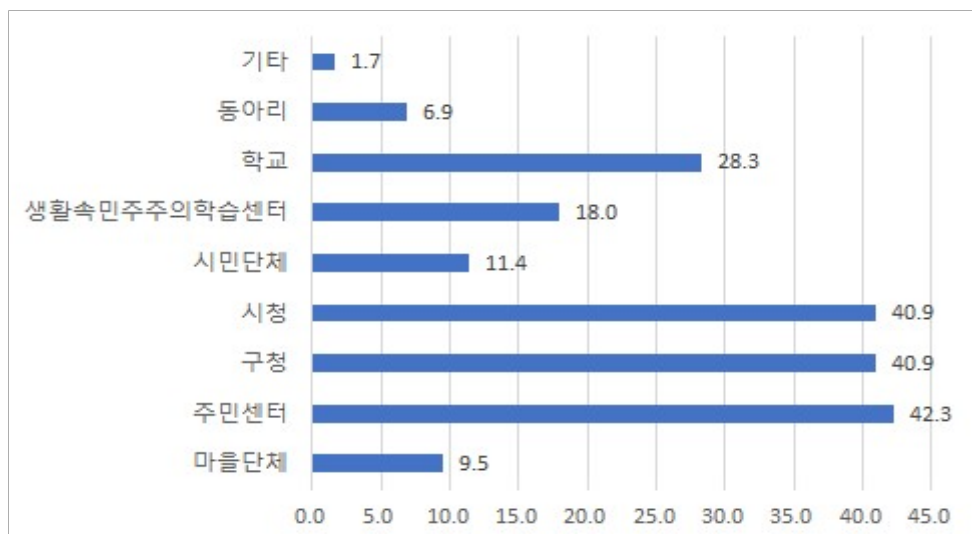
| 구분   |        | 알고 있음 | 들어본 적 있음 | 모름   |
|------|--------|-------|----------|------|
| 성별   | 남성     | 11.2  | 28.9     | 58.9 |
|      | 여성     | 7.1   | 29.1     | 63.7 |
| 연령   | 20대    | 10.4  | 22.8     | 66.8 |
|      | 30대    | 10.0  | 20.4     | 69.7 |
|      | 40대    | 8.0   | 30.8     | 61.2 |
|      | 50대    | 7.7   | 31.9     | 60.4 |
|      | 60대 이상 | 9.9   | 40.3     | 49.7 |
| 거주지  | 도심권역   | 4.1   | 30.6     | 65.3 |
|      | 동북권역   | 9.8   | 28.3     | 61.9 |
|      | 동남권역   | 10.7  | 29.2     | 60.1 |
|      | 서북권역   | 6.7   | 28.9     | 64.3 |
|      | 서남권역   | 8.3   | 28.1     | 63.7 |
| 수입   | 하      | 9.3   | 18.6     | 72.2 |
|      | 중하     | 6.8   | 22.9     | 70.3 |
|      | 중상     | 8.7   | 32.7     | 58.7 |
|      | 상      | 5.5   | 34.5     | 60.0 |
| 학력   | 고졸이하   | 5.4   | 27.1     | 67.5 |
|      | 대졸     | 9.9   | 28.6     | 61.6 |
|      | 대학원이상  | 9.5   | 33.8     | 56.8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11.2  | 34.3     | 54.5 |
|      | 단체 미참여 | 6.8   | 23.0     | 70.3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을 알고 있는 계층을 살펴보면 여성 40대 50대 연령층에 낮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로 보면 동남권역이 높게 나타나고 도심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도심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북권역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수입과 관련해서 보면 수입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수입이 높은 계층일수록 낮다. 한국사회에서 수입이 높은 계층은 사회적 활동이나 교육면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계층에 대한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을 알고 있지 않다. 단체활동과 관련해서는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알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서울시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연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홍보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계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그러므로 고연령층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향후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의 확산이 필요하다.

## 2)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담당기관

이번 시민대상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해야 할 기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의 담당기관을 주민센터, 구청, 시청으로 보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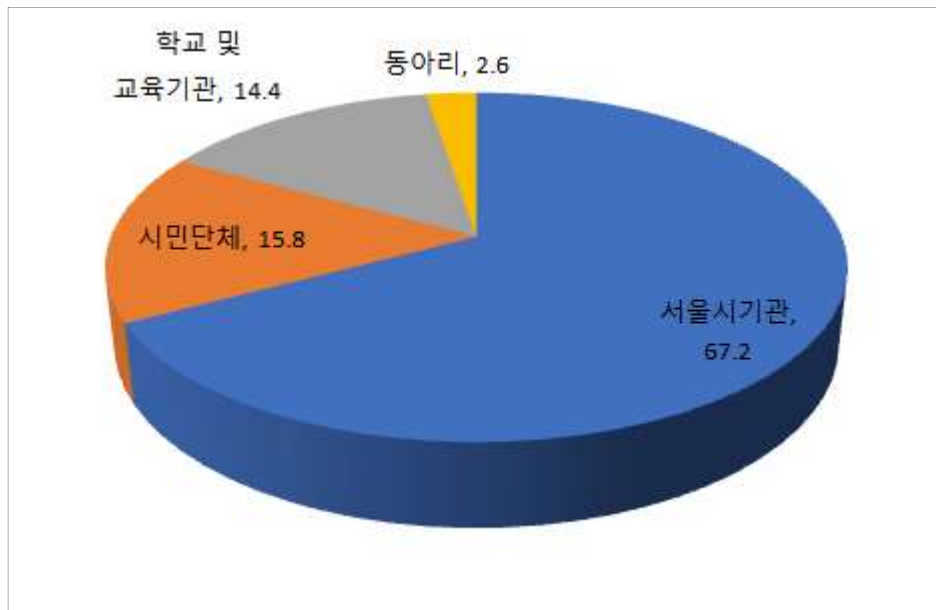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담당기관



그 다음으로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비율이 28.3%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18.0%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 시민단체를 꼽고 있는 비율은 11.4%, 마을단체 9.5%, 동아리 6.9%로 각기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민들은 여전히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서울시의 기관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마을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담당기관을 4가지로 분류한 결과이다. 서울시민의 67.2%가 서울시기관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시민단체 15.8%, 학교 및 교육기관 14.4%, 동아리를 선택한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그리고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등과 같은 기관의 역할을 확장시키고 동시에 시민단체, 마을단체 그리고 동아리와 같은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4>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담당기관의 4분류



서울시민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민주시민교육을 담당기관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서울시기관이었다. 시민의 자율적 그룹인 동아리가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나 교육기관(학교)이 담당해야 한다는 비율도 그다지 높지 않다.

서울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서울시에 소속된 기관에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계층에서 서울시에 소속된 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 중에서는 서남권역 시민들의 선호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입이 높을수록 서울시가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단체가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층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50대가 가장 높았으며 수입이 낮은 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동아리가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4배 가까이 높았다. 연령에서는 40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거주지역과 관련해서는 서북권역 시민들이 동아리의 역할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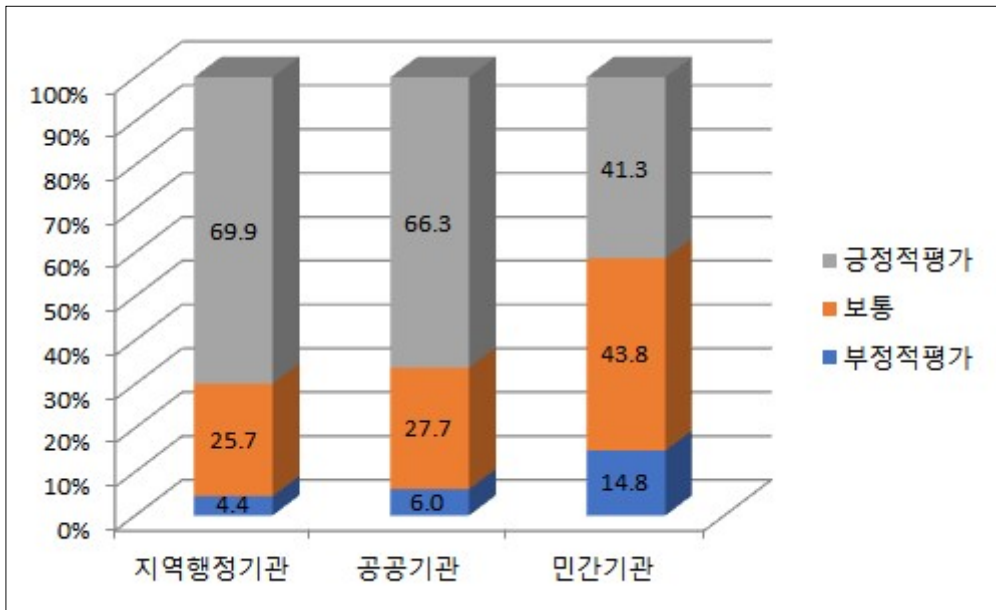
〈표 2〉 시민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민주시민교육 담당기관 선호도

| 구분   |        | 서울시기관 | 시민단체 | 교육기관 | 동아리 |
|------|--------|-------|------|------|-----|
| 성별   | 남성     | 63.2  | 17.2 | 15.6 | 4.1 |
|      | 여성     | 71.1  | 15.4 | 13.2 | 1.1 |
| 연령   | 20대    | 61.2  | 17.4 | 19.4 | 2.0 |
|      | 30대    | 75.2  | 12.9 | 11.0 | 1.0 |
|      | 40대    | 68.0  | 14.0 | 13.5 | 4.5 |
|      | 50대    | 64.8  | 18.7 | 14.8 | 1.7 |
|      | 60대 이상 | 66.7  | 16.1 | 13.3 | 3.9 |
| 거주지  | 도심권역   | 65.3  | 20.4 | 12.2 | 2.0 |
|      | 동북권역   | 66.7  | 14.5 | 16.7 | 2.2 |
|      | 동남권역   | 65.9  | 15.3 | 16.5 | 2.3 |
|      | 서북권역   | 66.7  | 13.3 | 13.3 | 6.7 |
|      | 서남권역   | 71.4  | 15.9 | 11.0 | 1.7 |
| 수입   | 하      | 67.7  | 21.9 | 8.3  | 2.1 |
|      | 중하     | 62.4  | 21.2 | 14.8 | 1.6 |
|      | 중상     | 73.2  | 9.7  | 14.4 | 2.8 |
|      | 상      | 73.6  | 12.9 | 11.0 | 2.5 |
| 학력   | 고졸이하   | 69.7  | 13.9 | 13.9 | 2.4 |
|      | 대졸     | 66.4  | 16.1 | 14.8 | 2.7 |
|      | 대학원이상  | 68.5  | 16.4 | 13.0 | 2.1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67.9  | 16.5 | 13.3 | 2.3 |
|      | 단체 미참여 | 66.5  | 15.0 | 15.6 | 2.9 |



### 3) 지역의 단체별 민주시민교육 운영 주체에 대한 의견

〈그림 5〉 지역의 단체별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서울시민들은 지역의 행정기관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지역에 존재하는 시/구 산하 공공기관의 진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시민단체나 민간단체 등과 같은 민간 기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41.3%로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보다 25%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부정적 평가는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3〉 시민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역행정기관 진행 평가

| 구분   |        | 부정적 평가 | 보통   | 긍정적 평가 |
|------|--------|--------|------|--------|
| 성별   | 남성     | 5.6    | 26.9 | 67.6   |
|      | 여성     | 3.2    | 24.6 | 72.2   |
| 연령   | 20대    | 1.1    | 27.0 | 71.8   |
|      | 30대    | 3.3    | 29.5 | 67.2   |
|      | 40대    | 3.9    | 29.9 | 66.2   |
|      | 50대    | 6.4    | 23.7 | 69.9   |
|      | 60대 이상 | 7.0    | 18.0 | 75.0   |
| 거주지  | 도심권역   | 0.0    | 32.6 | 67.4   |
|      | 동북권역   | 3.5    | 27.9 | 68.5   |
|      | 동남권역   | 5.8    | 20.1 | 74.0   |
|      | 서북권역   | 2.3    | 18.2 | 79.5   |
|      | 서남권역   | 5.8    | 23.6 | 70.5   |
| 수입   | 하      | 3.6    | 27.7 | 68.7   |
|      | 중하     | 4.8    | 26.7 | 68.5   |
|      | 중상     | 3.2    | 22.9 | 73.8   |
|      | 상      | 4.5    | 31.4 | 64.1   |
| 학력   | 고졸이하   | 6.4    | 25.0 | 68.6   |
|      | 대졸     | 3.9    | 26.0 | 70.2   |
|      | 대학원이상  | 5.1    | 25.4 | 69.6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3.0    | 22.4 | 74.7   |
|      | 단체 미참여 | 6.0    | 29.5 | 64.4   |

지역행정기관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전 계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다. 거주 지역에 주목해 본다면 동남 권역과 서북권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았다. 수입이 높은 계층에서는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하여 긍정적 평가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4〉 시민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공공기관 진행 평가

| 구분   |        | 부정적 평가 | 보통   | 긍정적 평가 |
|------|--------|--------|------|--------|
| 성별   | 남성     | 7.5    | 27.1 | 65.4   |
|      | 여성     | 4.5    | 28.3 | 67.1   |
| 연령   | 20대    | 3.4    | 28.5 | 68.2   |
|      | 30대    | 3.7    | 29.3 | 67.0   |
|      | 40대    | 5.5    | 28.6 | 65.9   |
|      | 50대    | 6.7    | 26.0 | 67.3   |
|      | 60대 이상 | 11.1   | 26.3 | 62.6   |
| 거주지  | 도심권역   | 4.5    | 34.1 | 61.4   |
|      | 동북권역   | 5.4    | 30.5 | 64.1   |
|      | 동남권역   | 9.6    | 25.9 | 64.5   |
|      | 서북권역   | 2.3    | 25.6 | 72.1   |
|      | 서남권역   | 5.8    | 24.1 | 70.1   |
| 수입   | 하      | 4.9    | 28.4 | 66.7   |
|      | 중하     | 6.3    | 33.0 | 60.8   |
|      | 중상     | 3.5    | 27.3 | 69.2   |
|      | 상      | 5.6    | 28.7 | 65.6   |
| 학력   | 고졸이하   | 8.1    | 31.5 | 60.4   |
|      | 대졸     | 5.6    | 27.5 | 66.9   |
|      | 대학원이상  | 5.8    | 24.6 | 69.6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4.6    | 24.1 | 71.3   |
|      | 단체 미참여 | 7.6    | 31.9 | 60.5   |

공공기관에서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남성보다는 여성계층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고, 2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북권역과 서남권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력이 높은 계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표 5〉 시민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민간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 구분   |        | 부정적 평가 | 보통   | 긍정적 평가 |
|------|--------|--------|------|--------|
| 성별   | 남성     | 16.3   | 42.1 | 41.5   |
|      | 여성     | 13.4   | 45.5 | 41.1   |
| 연령   | 20대    | 21.5   | 43.1 | 35.4   |
|      | 30대    | 13.7   | 52.9 | 33.3   |
|      | 40대    | 14.0   | 40.3 | 45.7   |
|      | 50대    | 11.3   | 43.2 | 43.6   |
|      | 60대 이상 | 14.4   | 38.3 | 47.2   |
| 거주지  | 도심권역   | 17.0   | 42.6 | 40.4   |
|      | 동북권역   | 18.1   | 42.3 | 39.6   |
|      | 동남권역   | 18.4   | 36.2 | 45.4   |
|      | 서북권역   | 6.8    | 52.3 | 40.9   |
|      | 서남권역   | 12.5   | 49.2 | 38.4   |
| 수입   | 하      | 13.2   | 36.3 | 50.5   |
|      | 중하     | 14.7   | 52.7 | 32.6   |
|      | 중상     | 11.4   | 41.3 | 47.3   |
|      | 상      | 16.7   | 46.3 | 37.0   |
| 학력   | 고졸이하   | 17.2   | 41.1 | 41.7   |
|      | 대졸     | 14.7   | 45.4 | 40.0   |
|      | 대학원이상  | 13.1   | 39.3 | 47.6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13.8   | 40.4 | 45.8   |
|      | 단체 미참여 | 16.1   | 47.8 | 36.1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을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2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60대 이상 고령자 층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 수입이 낮은 계층의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은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이 행정기관의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현재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학교의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

타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민주시민교육도 현재 제도권 교육의 연장선에서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나 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행정기관이나 학교에서 진행되는 제도권 교육과는 달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진행하는 민주주의 시민학습이라는 이미지를 정립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다.

#### 4)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정립과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이미지 정착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이해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을 분석한 한송희 외(2002: 13)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질문은 과학적 객관성이나 이론적 정합성을 요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실천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 비전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실천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구성해 낸 실천의 지평과 지점이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결국,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규정하는 일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인식, 그리고 비전이 담긴 실천행위이며, 일종의 내부 참여자들 사이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들이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그리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것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한송희 외, 2002: 16).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서울시는 민주시민교육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즉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점과 목적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설사 조례제정이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개념 정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념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이해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확정적 용어를 표방

하지 않더라도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구성하는 사상, 내용, 맥락, 그리고 실현 방식을 포함하는 교육 행위나 현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포괄성과 광범위성으로 인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합의된 개념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민주시민교육을 한국적 상황에서 정의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정의와 내용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정의는 상이한 관점과 실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된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컨대 정치학에서 “민주주의” 용어만큼 다양하게 정의되는 단어도 없을 정도이다. 결국 “민주시민교육”이란 용어의 개념정의도 그간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진행 과정을 토대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서울시, 2019).

한편 “민주시민교육”이란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높여 공동체 삶의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제반 교육 및 활동(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 2011)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여기에서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며’, 즉 「시민성 교육」이며, ‘공동체 삶의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즉 「정치참여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015)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는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즉 「시민성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거정치교육법안(2013)에서는 “선거 및 정치생활에서 국민의 주권의식을 양양하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는 선거 및 정치 분야에 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 주권의식을 양양하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시민성 교육」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부분은 결국은 「정치참여 교육」을 의미한다.

〈표 6〉 기존 활동 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정의와 기본원칙

| 단체               | 정의   | 기본원칙  |
|------------------|--|---|
|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2011) | “민주시민교육”이란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며 민주역량을 높여 공동체 삶의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제반 교육 및 활동을 말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민주도성</li> <li>② 다양성 존중</li> <li>③ 참여자 중심</li> <li>④ 정치적 중립</li> <li>⑤ 독립성·자율성</li> </ul>                  |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015) |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li> <li>② 정치적 중립</li> <li>③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li> <li>④ 기관 독립성</li> <li>⑤ 지배경(평생 동안 장려)</li> </ul> |
| 선거정치교육법안(2013)   | “선거정치교육”이란 선거 및 정치생활에서 국민의 주권의식을 양양하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민주적 기본질서</li> <li>② 개인이나 정당 또는 단체이익 금지</li> <li>③ 자발적 참여</li> <li>④ 개방적 방법</li> </ul>                      |
| 서울시조례(2014)      |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li> <li>② 공익적 목적</li> <li>③ 보편적 접근성</li> <li>④ 자발적 참여</li> </ul>                              |
| 징검다리교육공동체(2017)  |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의 관점 및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정치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입교화 금지원칙</li> <li>② 논쟁성 유지원칙</li> <li>③ 이해관계 고려원칙</li> </ul>  |
| 선거연수원(2017)      | 시민이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 및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학습을 말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치적 중립성</li> <li>② 민주성</li> <li>③ 참여성(자발적 참여)</li> <li>④ 보충성</li> </ul>                                    |

그리고 징검다리교육공동체(2017)에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의 관점 및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정치교육’ 즉 「시민성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정의 및 이해되고 있다. 본 연구용역에서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기본조례(2014)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즉,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시민성교육」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즉 「정치참여 교육」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기본조례(2014)에서 규정한 개념 정의로 충분한가. 또는 이렇게 개념정의를 한다고 할 때, 이러한 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가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취지와 연결시켜 볼 때, 시민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전략보다는 시민 스스로가 학습하는 ‘시민학습’이라는 전략에서 향후 종합계획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시민력」이라는 말이 주목 받고 있다. 「시민력」이란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시민이 상호 연계하여 지역사회운영에 참여하는 활동, 또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제반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 (Social Civic Power)”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시민력」은 서울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치」와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결국, 「시민력」 기르기 위해서 “시민이 자발적, 주체적으로 시도하는 시민학습을 민주시민교육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자발적, 주체적인 학습만이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나 시민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시민교육에 참여를 계기로 시민은 주체적인 시민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 교육 참여를 통해서 시민성과 정치참여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와 같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력」의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민력」 향상은 시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사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



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서울시 시민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시민들에게 「서울시의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자발적 학습모임(동아리)을 만들어서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가요?」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비율은 33.4%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참여의사 없음’으로 표시한 비율 17.7%의 2배 가까이 많이 나타났다. ‘보통 정도’라고 표시한 비율이 48.9%로 가장 높았다. 결국 서울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참여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민주시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 참여의 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의 참여의사가 높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수입과 학력도 마찬가지로 수입과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결국 적극적 참여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수입이 낮고 학력이 낮은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대해서도 적극적 참여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 참여의사 3분류



〈표 7〉 사회경제적 배경과 민주시민교육 자발적 참여의사

| 구분   |        | 참여의사 없음 | 보통   | 적극적 참여 |
|------|--------|---------|------|--------|
| 성별   | 남성     | 15.9    | 49.6 | 34.5   |
|      | 여성     | 19.6    | 48.2 | 32.2   |
| 연령   | 20대    | 23.2    | 49.0 | 27.8   |
|      | 30대    | 22.1    | 49.0 | 28.9   |
|      | 40대    | 15.6    | 53.6 | 30.8   |
|      | 50대    | 14.9    | 48.2 | 38.6   |
|      | 60대 이상 | 13.0    | 43.5 | 43.5   |
| 거주지  | 도심권역   | 25.0    | 45.8 | 29.2   |
|      | 동북권역   | 20.2    | 48.7 | 31.2   |
|      | 동남권역   | 19.9    | 46.8 | 33.3   |
|      | 서북권역   | 11.1    | 48.9 | 40.0   |
|      | 서남권역   | 16.8    | 49.7 | 33.6   |
| 수입   | 수입 하   | 20.7    | 47.8 | 31.5   |
|      | 수입 중하  | 19.5    | 58.4 | 22.2   |
|      | 수입 중상  | 12.7    | 48.2 | 39.1   |
|      | 수입 상   | 18.3    | 45.7 | 36.0   |
| 학력   | 고졸 이하  | 19.1    | 47.5 | 33.3   |
|      | 대졸     | 17.1    | 50.4 | 32.5   |
|      | 대학원 이상 | 19.3    | 42.8 | 37.9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13.5    | 46.0 | 40.5   |
|      | 단체 미참여 | 22.7    | 52.2 | 25.2   |

단체 활동 유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 참여의사를 가진 비율이 현재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40.5%로 나타났으며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2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를 고려할 때 사회단체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제공은 향후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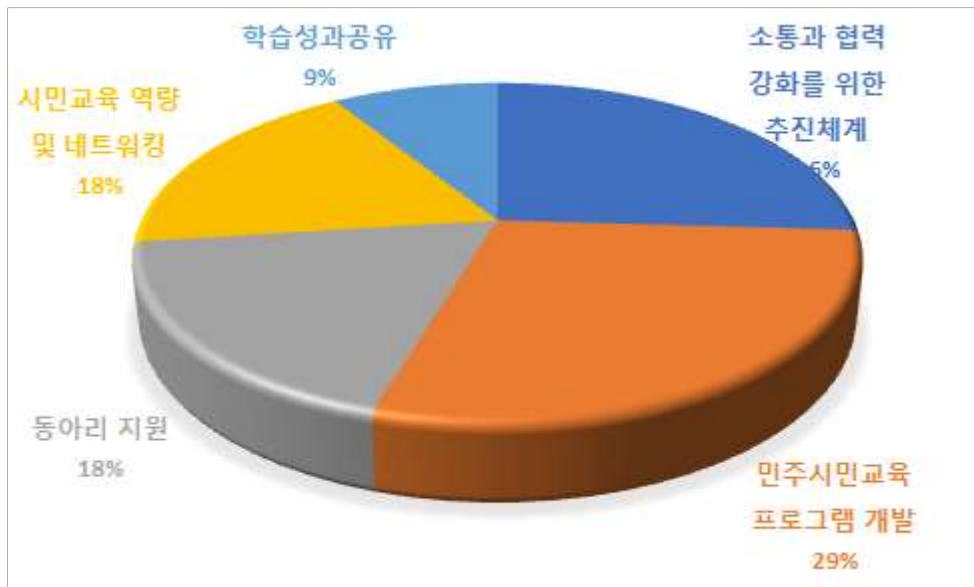
거주지역과 관련하여서는 서북권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적극적 참여 의사 비율을 가진 비율이 4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도심권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25%로 서북권역이 11%인 것이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서는 20대에서 참여의사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시민들을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자 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가진 비율이 높다. 그러므로 고령자

층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제작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북권역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특정지역을 특화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 6)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업 중 흥미 있는 프로그램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다.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프로그램 중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소통과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활동재원과 콘텐츠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므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18%로 관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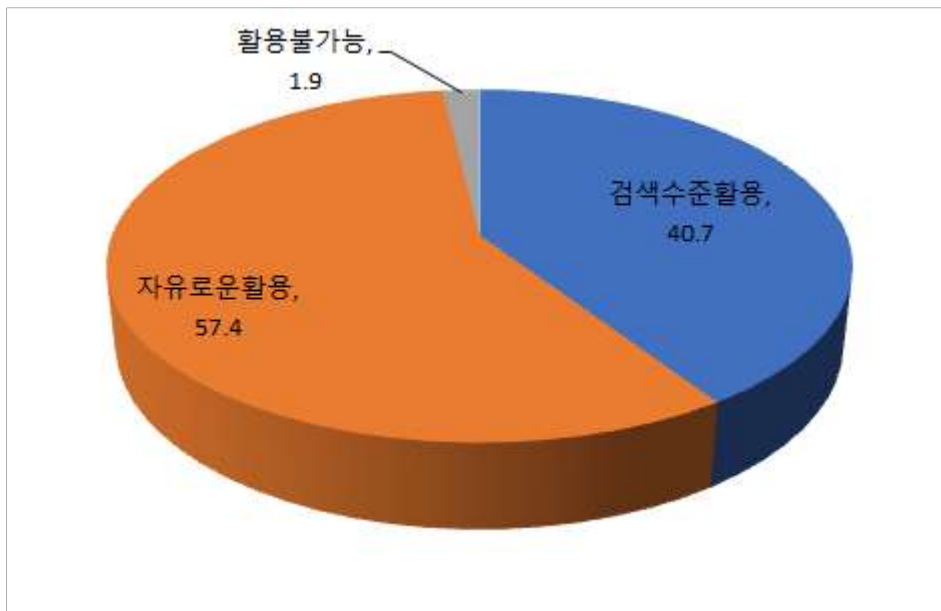
〈그림 7〉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는 프로그램



## 7)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운영과 참여

서울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 수준에 대하여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4%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통상적인 「검색수준활용」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0.7%로 나타났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이용 불가능」 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민들은 온라인 콘텐츠 이용에 거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8〉 서울시민의 온라인 콘텐츠이용 수준



〈표 8〉 사회경제적 배경과 온라인콘텐츠 이용 3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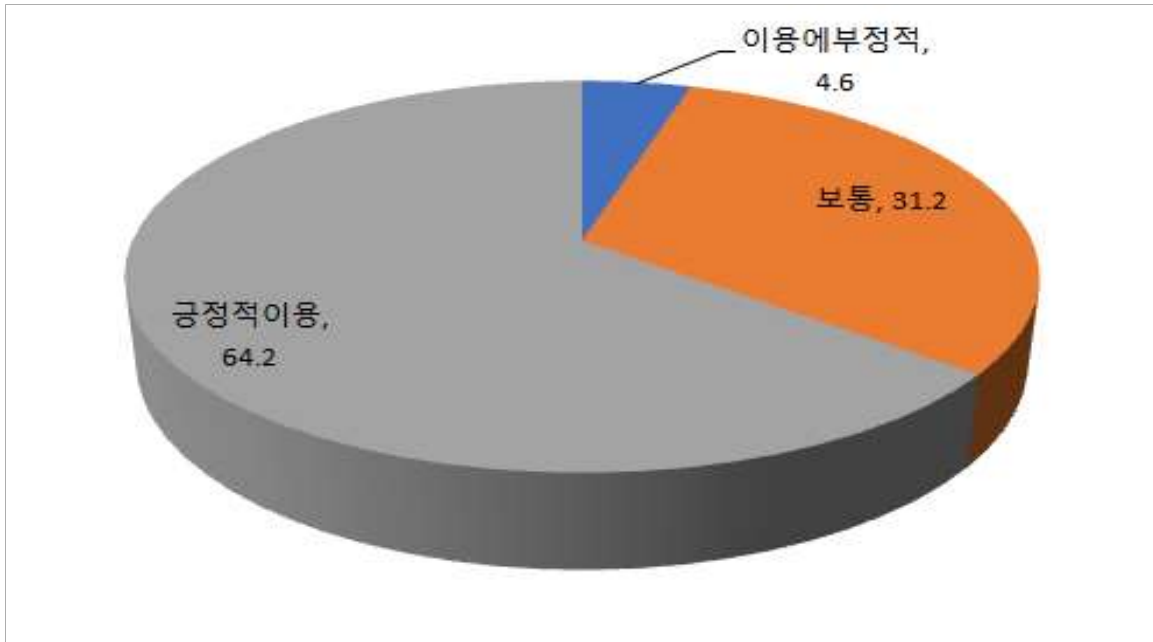
| 구분   |        | 검색수준 활용 | 자유로운 활용 | 활용 불가능 |
|------|--------|---------|---------|--------|
| 성별   | 남성     | 39.9    | 57.6    | 2.5    |
|      | 여성     | 41.6    | 57.1    | 1.3    |
| 연령   | 20대    | 28.2    | 70.3    | 1.5    |
|      | 30대    | 37.9    | 60.7    | 1.4    |
|      | 40대    | 37.5    | 59.4    | 3.1    |
|      | 50대    | 49.4    | 48.9    | 1.7    |
|      | 60대 이상 | 50.8    | 47.5    | 1.7    |
| 거주지  | 도심권역   | 38.8    | 57.1    | 4.1    |
|      | 동북권역   | 38.1    | 60.6    | 1.3    |
|      | 동남권역   | 43.8    | 55.1    | 1.1    |
|      | 서북권역   | 37.8    | 57.8    | 4.4    |
|      | 서남권역   | 42.9    | 55.1    | 2.0    |
| 수입   | 하      | 49.5    | 46.4    | 4.1    |
|      | 중하     | 42.7    | 55.7    | 1.6    |
|      | 중상     | 40.0    | 58.7    | 1.3    |
|      | 상      | 43.6    | 54.5    | 1.8    |
| 학력   | 고졸이하   | 49.4    | 48.2    | 2.4    |
|      | 대졸     | 40.7    | 57.4    | 1.9    |
|      | 대학원이상  | 31.1    | 67.6    | 1.4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37.0    | 61.9    | 1.1    |
|      | 단체 미참여 | 45.1    | 52.0    | 2.9    |

서울시 시민들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검색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주목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검색수준의 활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검색수준의 활용은 수입이 낮고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온라인 콘텐츠를 스스로 작성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수준에서는 젊은 계층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관심이 없거나 활용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대와 수입이 낮은 계층, 학력이 낮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참여자의 64.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민주시민교육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은 4.6%에 불과하였다. 결국 서울시민들의 대부분은 온라인 민주시민교육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 수준도 온라인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온라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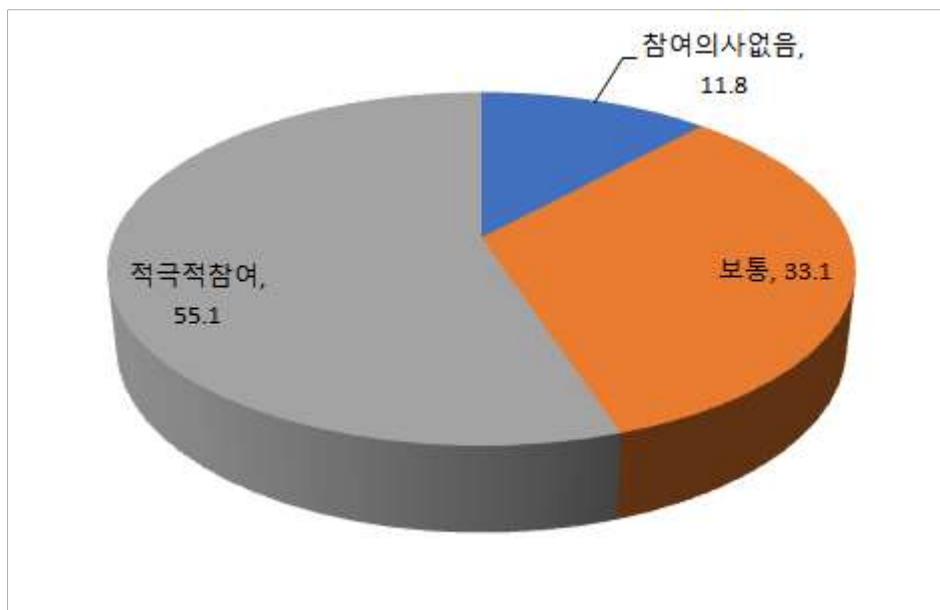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제공시 이용에 긍정적인 계층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50대 이상 고 연령층에서 긍정적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북권역 시민들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입측면에서 보면 수입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용에 긍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도 마찬가지로 대학원 이상 고학력자일수록 이용에 긍정적이다.

또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용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 고 연령층에서 온라인 민주시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젊은 층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 및 계층에게 온라인 민주시민 교육 콘텐츠 제공이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9〉 사회경제적 배경과 온라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

| 구분   |        | 이용에 부정적 | 보통   | 긍정적 이용 |
|------|--------|---------|------|--------|
| 성별   | 남성     | 4.6     | 30.0 | 65.4   |
|      | 여성     | 4.5     | 32.4 | 63.0   |
| 연령   | 20대    | 4.7     | 32.1 | 63.2   |
|      | 30대    | 4.5     | 37.2 | 58.3   |
|      | 40대    | 3.2     | 35.2 | 61.6   |
|      | 50대    | 6.1     | 24.5 | 69.4   |
|      | 60대 이상 | 4.1     | 27.2 | 68.6   |
| 거주지  | 도심권역   | 2.1     | 27.1 | 70.8   |
|      | 동북권역   | 6.6     | 33.0 | 60.4   |
|      | 동남권역   | 3.5     | 36.5 | 60.0   |
|      | 서북권역   | 2.4     | 23.8 | 73.8   |
|      | 서남권역   | 4.2     | 28.9 | 66.9   |
| 수입   | 하      | 5.7     | 37.5 | 56.8   |
|      | 중하     | 5.0     | 36.5 | 58.6   |
|      | 중상     | 2.7     | 25.9 | 71.4   |
|      | 상      | 5.8     | 32.1 | 62.2   |
| 학력   | 고졸이하   | 3.2     | 32.5 | 64.3   |
|      | 대졸     | 5.3     | 31.7 | 63.0   |
|      | 대학원이상  | 2.7     | 27.4 | 69.9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3.6     | 26.4 | 70.1   |
|      | 단체 미참여 | 5.7     | 36.7 | 57.5   |

〈그림 10〉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참여의사



〈표 10〉 사회경제적 배경과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참여의사

| 구분   |        | 참여의사 없음 | 보통   | 적극적 참여 |
|------|--------|---------|------|--------|
| 성별   | 남성     | 10.0    | 36.2 | 53.8   |
|      | 여성     | 13.7    | 29.9 | 56.4   |
| 연령   | 20대    | 12.6    | 38.2 | 49.2   |
|      | 30대    | 14.6    | 33.7 | 51.7   |
|      | 40대    | 12.3    | 35.2 | 52.5   |
|      | 50대    | 10.4    | 30.0 | 59.6   |
|      | 60대 이상 | 9.0     | 28.2 | 62.7   |
| 거주지  | 도심권역   | 6.1     | 38.8 | 55.1   |
|      | 동북권역   | 14.5    | 32.3 | 53.2   |
|      | 동남권역   | 11.1    | 35.1 | 53.8   |
|      | 서북권역   | 6.7     | 20.0 | 73.3   |
|      | 서남권역   | 12.4    | 35.2 | 52.4   |
| 수입   | 수입 하   | 13.3    | 34.4 | 52.2   |
|      | 수입 중하  | 10.9    | 41.5 | 47.5   |
|      | 수입 중상  | 9.0     | 30.4 | 60.5   |
|      | 수입 상   | 12.4    | 33.5 | 54.0   |
| 학력   | 고졸이하   | 10.8    | 34.2 | 55.1   |
|      | 대졸     | 12.4    | 33.1 | 54.5   |
|      | 대학원이상  | 10.3    | 31.7 | 57.9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9.0     | 26.8 | 64.2   |
|      | 단체 미참여 | 15.1    | 40.3 | 44.7   |

이번 설문조사에서 향후 서울시가 온라인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한다면, 참여 여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55.1%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진 시민으로 나타났다. 「참여의사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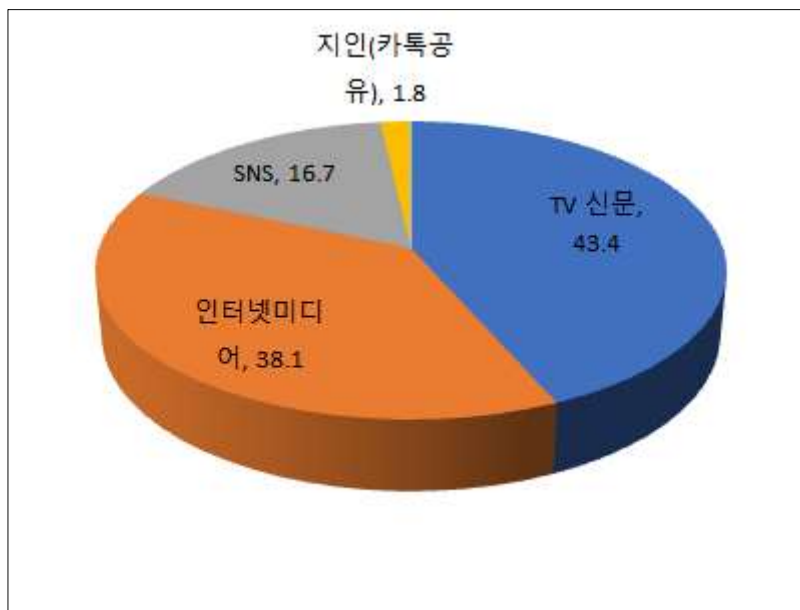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서울시는 민주시민교육과정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공을 새롭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라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비율도 높았다. 특히, 온라인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한다는 비율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의사도 높아지고 있다. 학력이 높은 계층일수록 적극적 참여의사 비율도 높다. 거주 지역에 주목하여 보면 서북권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8)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보경로

다음으로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은 어떤 경로(미디어)를 통해서 얻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보 경로를 조사하였다. 서울시 시민들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보를 「TV/신문」에서 얻고 있는 비율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인터넷 미디어로 38.1%이다. SNS는 16.7%를 차지하였다. 이웃사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정보를 얻고 있는 비율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대인관계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배경에는 아직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의 일상적 화제로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보를 SNS를 통해서 얻고 있는 비율이 낮다. 특히, TV/신문을 통해서 얻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세대별 미디어 이용패턴과 결부시켜 고민해 볼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젊은 층은 기존 미디어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정보제공은 TV/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대별 미디어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SNS를 활용한 민주시민교육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림 11〉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표 11〉 사회경제적 배경과 민주시민교육 정보경로

| 구분   |        | TV 신문 | 인터넷미디어 | SNS  | 지인<br>(카톡공유) |
|------|--------|-------|--------|------|--------------|
| 성별   | 남성     | 42.6  | 40.7   | 15.0 | 1.7          |
|      | 여성     | 43.2  | 35.6   | 18.4 | 1.9          |
| 연령   | 20대    | 31.2  | 39.6   | 27.7 | 1.3          |
|      | 30대    | 35.1  | 42.7   | 19.0 | 3.3          |
|      | 40대    | 40.6  | 38.2   | 19.2 | 1.3          |
|      | 50대    | 54.9  | 34.5   | 9.4  | 1.3          |
|      | 60대 이상 | 55.2  | 34.8   | 8.3  | 1.7          |
| 거주지  | 도심권역   | 55.1  | 30.6   | 14.3 | 0.0          |
|      | 동북권역   | 43.7  | 36.2   | 17.2 | 2.9          |
|      | 동남권역   | 47.8  | 38.2   | 13.5 | 0.6          |
|      | 서북권역   | 35.6  | 31.1   | 33.3 | 0.0          |
|      | 서남권역   | 40.6  | 40.9   | 17.2 | 1.3          |
| 수입   | 하      | 32.0  | 39.2   | 28.9 | 0.0          |
|      | 중하     | 42.7  | 38.0   | 17.7 | 1.6          |
|      | 중상     | 48.0  | 38.7   | 11.7 | 1.7          |
|      | 상      | 38.8  | 38.8   | 19.4 | 3.0          |
| 학력   | 고졸이하   | 49.4  | 32.5   | 16.3 | 1.8          |
|      | 대졸     | 42.1  | 39.1   | 16.6 | 2.2          |
|      | 대학원이상  | 43.2  | 39.2   | 17.6 | 0.0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44.1  | 36.3   | 17.7 | 1.9          |
|      | 단체 미참여 | 42.6  | 40.2   | 15.6 | 1.6          |

사회경제적 배경과 민주시민교육 정보경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TV/신문은 연령별로 보면, 50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미디어는 20대, 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SNS는 20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도심지역에서 TV/신문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도심의 고령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소득수준에 주목해 본다면, TV/신문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향후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령, 거주지역 등과 같은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 9) 민주시민교육의 중점대상과 내용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점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6.2%)이 학생이나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이 정치인/공무원 15.6%로 높게 나타났다. 성인 14.9%, 고령자 8.7%,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룹을 중점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4.6%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민주시민교육 중점 대상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계층 가운데 즉, 청소년, 대학생, 청년층, 성인여성/주부, 성인 남성,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정치인, 공무원 등 중에서 학생이나 청년층을 중점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서울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세대나 연령층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인/공무원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에 대한 스캔들이나 성폭력 문제 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민주시민교육의 중점 대상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사회경제적 배경과 민주시민교육 중점대상

|      |        | 학생 및 청년 | 성인   | 고령층  | 사회적 약자 | 정치인<br>공무원 |
|------|--------|---------|------|------|--------|------------|
| 성별   | 남성     | 56.9    | 13.6 | 8.3  | 5.6    | 15.5       |
|      | 여성     | 55.6    | 16.2 | 9.0  | 3.7    | 15.6       |
| 연령   | 20대    | 61.8    | 16.1 | 9.5  | 5.0    | 7.5        |
|      | 30대    | 60.6    | 13.0 | 8.7  | 4.3    | 13.5       |
|      | 40대    | 60.5    | 15.9 | 8.6  | 1.8    | 13.2       |
|      | 50대    | 48.5    | 12.7 | 9.6  | 5.2    | 24.0       |
|      | 60대 이상 | 49.7    | 17.3 | 6.7  | 7.3    | 19.0       |
| 거주지  | 도심권역   | 47.9    | 18.8 | 6.3  | 6.3    | 20.8       |
|      | 동북권역   | 60.8    | 10.8 | 8.1  | 4.6    | 15.9       |
|      | 동남권역   | 55.1    | 14.8 | 6.8  | 6.3    | 17.0       |
|      | 서북권역   | 50.0    | 15.9 | 11.4 | 6.8    | 15.9       |
|      | 서남권역   | 53.0    | 19.3 | 10.3 | 0.3    | 14.3       |
| 수입   | 하      | 57.9    | 13.7 | 6.3  | 7.4    | 14.7       |
|      | 중하     | 57.7    | 16.4 | 10.1 | 3.2    | 12.7       |
|      | 중상     | 56.0    | 16.1 | 11.7 | 5.0    | 11.1       |
|      | 상      | 54.7    | 16.8 | 7.5  | 2.5    | 18.6       |
| 학력   | 고졸이하   | 55.6    | 13.1 | 8.8  | 6.9    | 15.6       |
|      | 대졸     | 55.6    | 15.8 | 8.8  | 3.6    | 16.2       |
|      | 대학원이상  | 59.9    | 12.2 | 8.2  | 7.5    | 12.2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55.3    | 16.6 | 9.0  | 4.9    | 14.2       |
|      | 단체 미참여 | 57.3    | 12.9 | 8.3  | 4.4    | 17.1       |

서울시민들은 청년 및 학생 계층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생과 청년이 중시 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는데 이것은 젊은 사람일수록 스스로가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거주 지역에 주목하면 동북권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성인을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중점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령층을 중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고, 60대 이상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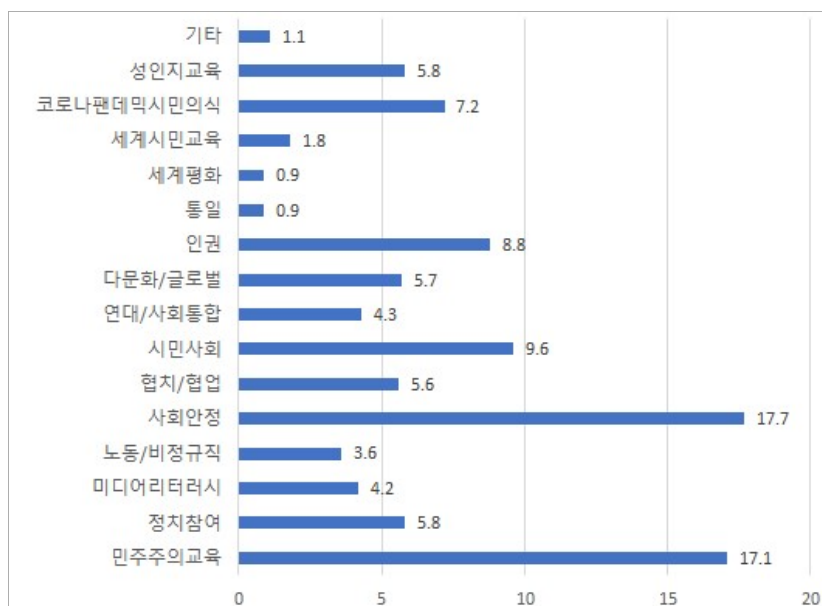
정치인 및 공무원을 중점 대상으로 생각하는 계층은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고 수

입이 높은 사람일수록 중점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치인 공무원을 중점 교육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 지역에 주목해 보면 도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정치인 공무원이 중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모든 계층에서 대체로 스스로를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대는 예외적으로 자신을 민주시민교육의 중점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한다면, 20대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20대는 성인들이나 특히, 고령자 세대를 민주시민교육의 중점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반대로 60대 이상에서는 스스로를 민주시민교육의 중점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

서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식의 문제는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을 표방하는 서울시의 민주시민교육을 고려할 때,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은 일상 속에서 시민 스스로가 학습하는 자기주도 학습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가 학습하는 시민교육이라는 관점보다는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민주시민교육을 기존의 제도권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일상 속에서 학습하는 “시민학습”이라는 생성,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 흥미를 가지는 민주시민교육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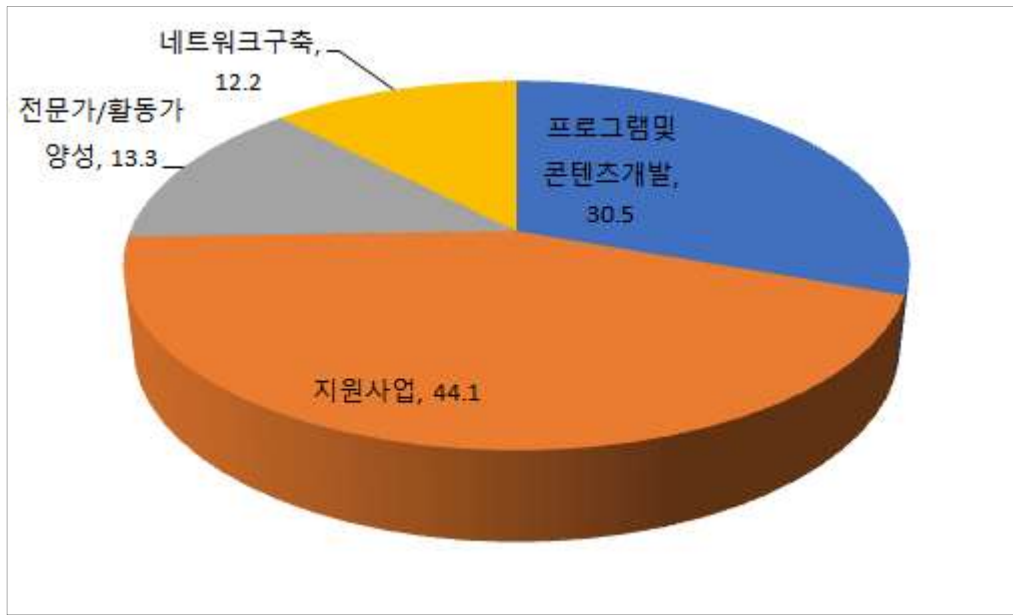
서울 시민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는 민주시민교육 분야는 「민주주의 교육」, 「사회 안정」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시민사회」, 「인권」 등이다. 또한 올해 들어 시작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시민의식에 대한 문제도 흥미 있는 민주시민교육 분야(코로나 팬데믹 시민의식 7.2%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에 민주시민교육 분야로 진행되어 온 민주주의 교육, 정치참여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노동문제, 협치/협업, 시민사회, 연대/사회통합, 다문화/글로벌문제, 인권, 통일, 세계평화, 세계시민교육 등과 더불어 '코로나시대의 시민의식', 그리고 '성인지 교육'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분야도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분야로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민주시민교육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② 교육 콘텐츠 제작, ③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시민단체 지원, ④ 동아리 활동 등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⑤ 지역사회의 학교, 시민단체, 평생교육기관(시민대학) 등과 연계활동, ⑥ 주민 센터/구청 등 행정조직에서 진행하는 사업 지원, ⑦ 시민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⑧ 현장 활동가 지원 사업, ⑨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 지원, ⑩ 시민교육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공유체계 구축, ⑪ 지역사회활동, 지자체 의사결정참여 등 사회적 참여 활동 지원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였다. 첫째, 지원사업 둘째,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셋째, 전문가/활동가 양성,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이다.

이러한 사업 가운데 시민들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44.1%)」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0.5%)」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시민에 대한 지원 사업은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지도나 참여도가 낮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확대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은 서울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개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4〉 민주시민교육 우선 추진분야



〈표 13〉 사회경제적 배경과 우선 추진분야

| 구분   |        | 프로그램 및 콘텐츠개발 | 지원 사업 | 전문가활동가 양성 | 네트워크구축 |
|------|--------|--------------|-------|-----------|--------|
| 성별   | 남성     | 29.3         | 45.5  | 14.5      | 10.8   |
|      | 여성     | 30.5         | 44.1  | 13.3      | 12.2   |
| 연령   | 20대    | 28.7         | 46.5  | 14.9      | 9.9    |
|      | 30대    | 33.6         | 40.8  | 14.2      | 11.4   |
|      | 40대    | 29.5         | 46.0  | 14.3      | 10.3   |
|      | 50대    | 27.7         | 41.3  | 14.9      | 16.2   |
|      | 60대 이상 | 33.7         | 46.4  | 7.2       | 12.7   |
| 거주지  | 도심권역   | 30.6         | 51.0  | 10.2      | 8.2    |
|      | 동북권역   | 29.1         | 43.4  | 14.0      | 13.5   |
|      | 동남권역   | 29.8         | 38.2  | 14.6      | 17.4   |
|      | 서북권역   | 22.2         | 48.9  | 22.2      | 6.7    |
|      | 서남권역   | 32.0         | 47.9  | 11.2      | 8.9    |
| 수입   | 수입 하   | 29.9         | 46.4  | 13.4      | 10.3   |
|      | 수입 중하  | 29.2         | 41.1  | 13.5      | 16.1   |
|      | 수입 중상  | 32.3         | 42.3  | 15.3      | 10.0   |
|      | 수입 상   | 27.3         | 55.8  | 9.7       | 7.3    |
| 학력   | 고졸 이하  | 31.3         | 50.0  | 8.4       | 10.2   |
|      | 대졸     | 28.8         | 44.9  | 13.0      | 13.3   |
|      | 대학원 이상 | 37.8         | 33.1  | 20.3      | 8.8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31.5         | 46.0  | 11.7      | 10.8   |
|      | 단체 미참여 | 29.3         | 41.8  | 15.2      | 13.7   |

서울시민의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은 지원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이다. 특히 지원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계층은 학력이 낮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 활동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학력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다.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사업 중에서 네트워크 추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주지에 주목하여 보면 동남권 지역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10)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추진체계)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체계문제는 오래전부터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초기에는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 주도형의 추진체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협업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이 고려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추진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시민단체 협업」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0.3%). 그 다음이 「행정기관주도」로 30.3%이다. 「서울시+평생교육기관 연계」 형태에 대해서는 23.9%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단독으로 민주시민교육 추진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5.5%에 불과하였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또는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업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64.2%이다.

서울 시민의 절대다수가 어떤 형태이든 협업의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최근 행정업무의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역량을 동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New Normal)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하고 있는 「시민력」 개념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시민력」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시민력」이라는 말이 주목 받고 있다. 「시민력」이란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시민이 상호 연계하여 지역사회운영에 참여하는 활동, 또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제반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Social Civic Power)”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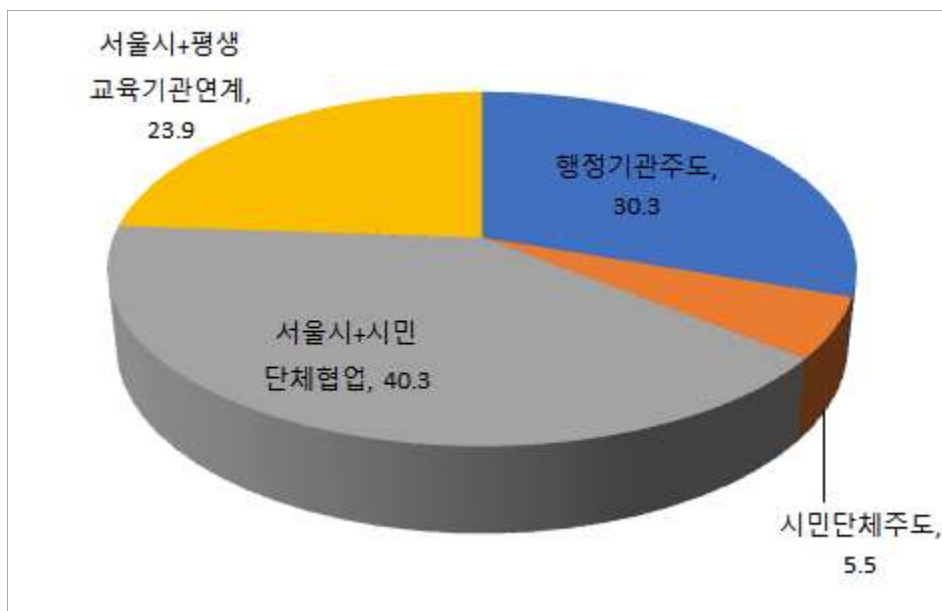
「시민력」은 서울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치」와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민



주시민교육은 「시민력」을 기르는 교육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시민력」 기르기 위해서 “시민이 자발적, 주체적으로 시도하는 시민학습을 민주시민교육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향후 서울시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로 「시민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시민력」은 시민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문제 해결에도 공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력」은 서울시가 지향하고 있는 「시민민주주의」,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론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즉 민주시민교육이 「시민력」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시민민주주의」의 지탱하고 촉진하는 역량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15〉 민주시민교육의 거버넌스 형태에 대한 선호도



〈표 14〉 사회경제적 배경과 민주시민교육의 거버넌스 형태

| 구분   |        | 행정기관주도 | 시민단체주도 | 서울시+시민단체협업 | 서울시+평생교육기관연계 |
|------|--------|--------|--------|------------|--------------|
| 성별   | 남성     | 30.4   | 8.9    | 38.2       | 22.5         |
|      | 여성     | 30.1   | 2.2    | 42.3       | 25.3         |
| 연령   | 20대    | 29.7   | 6.9    | 36.6       | 26.7         |
|      | 30대    | 28.9   | 5.2    | 43.1       | 22.7         |
|      | 40대    | 30.8   | 5.8    | 43.8       | 19.6         |
|      | 50대    | 29.4   | 6.0    | 39.1       | 25.5         |
|      | 60대 이상 | 33.1   | 3.3    | 38.1       | 25.4         |
| 거주지  | 도심권역   | 44.9   | 10.2   | 14.3       | 30.6         |
|      | 동북권역   | 28.6   | 4.8    | 42.9       | 23.8         |
|      | 동남권역   | 29.2   | 5.1    | 42.1       | 23.6         |
|      | 서북권역   | 26.7   | 4.4    | 46.7       | 22.2         |
|      | 서남권역   | 31.4   | 4.0    | 40.9       | 23.8         |
| 수입   | 하      | 29.9   | 6.2    | 43.3       | 20.6         |
|      | 중하     | 23.4   | 3.1    | 46.4       | 27.1         |
|      | 중상     | 35.3   | 4.7    | 40.3       | 19.7         |
|      | 상      | 31.5   | 8.5    | 39.4       | 20.6         |
| 학력   | 고졸이하   | 35.5   | 3.6    | 41.0       | 19.9         |
|      | 대졸     | 30.9   | 6.1    | 39.6       | 23.4         |
|      | 대학원이상  | 21.6   | 4.7    | 42.6       | 31.1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28.8   | 5.1    | 42.8       | 23.2         |
|      | 단체 미참여 | 32.0   | 5.9    | 37.3       | 2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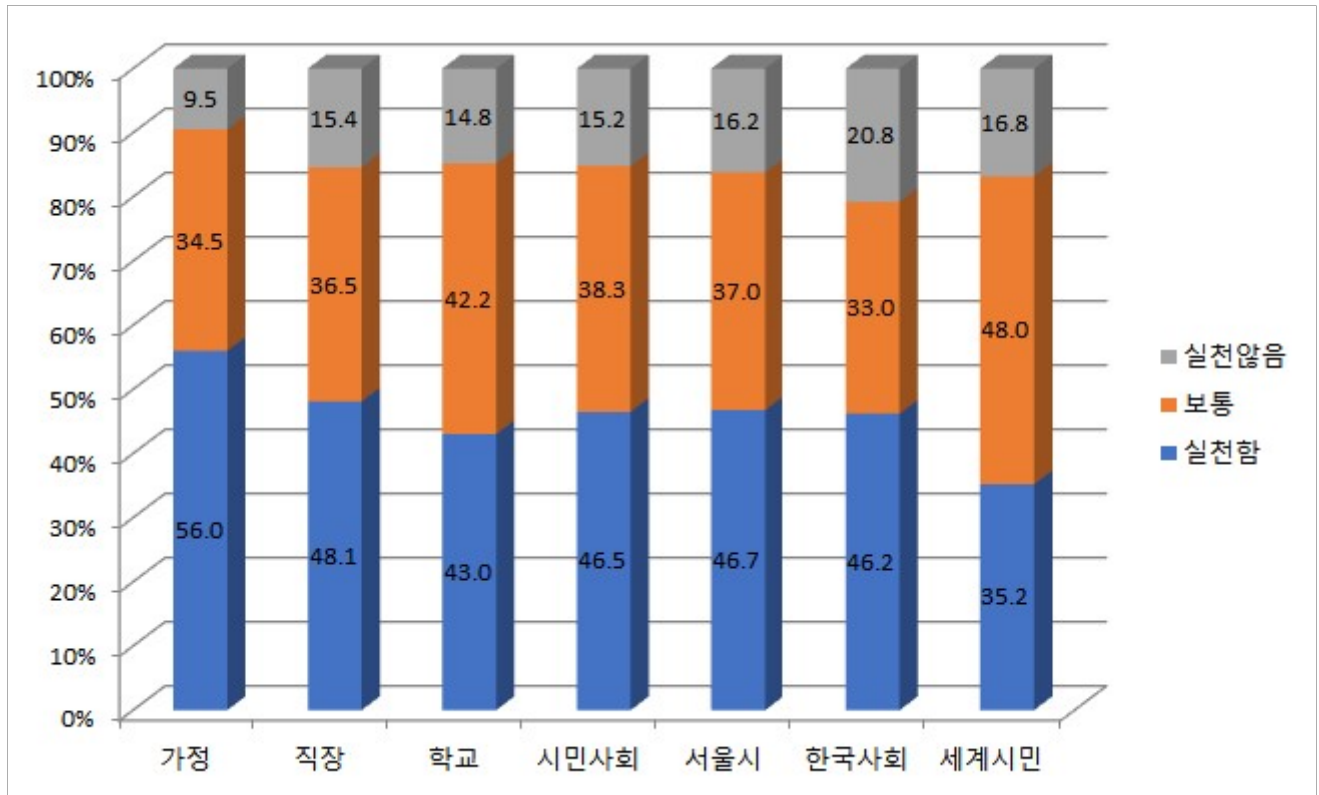
거버넌스 형태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점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일수록 행정기관 주도의 비율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행정기관 주도의 비율이 높다. 시민단체 주도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대와 수입이 높은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시민단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0대와 40대 계층이 대부분이고 수입이 높은 계층에게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서울시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11) 서울시민의 민주시민으로서 역량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인식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서 일상 속에서 얼마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시민들에게 가정, 직장, 학교, 시민사회나 서울지역사회,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의 성원으로써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림 16〉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 실천 정도



서울시민들은 가정이나 직장, 또는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천하고 있지 않음」의 비율은 가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 한국 사회에서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20.8%).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정 56.0%, 직장 48.1%로 다른 생활 단위보다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 또는 의식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포함하면, 시민들의 절대 다수는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 또는 의식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한

다. 향후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과 역할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실천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정이나 직장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은 물론 정치참여, 미디어 리터러시, 협치/협업, 연대/사회통합, 인권, 성인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시민의식, 통일, 세계시민으로서 역할 등 다양한 민주주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앞에서 말한 「시민력」 과도 연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은 실천하고 있지 않은 시민이나 「보통」 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을 「실천하는 시민」 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표 15〉 사회 경제적 배경과 가정에서 민주주의 실천

| 구분   |        | 실천함  | 보통   | 실천 않음 |
|------|--------|------|------|-------|
| 성별   | 남성     | 52.2 | 37.0 | 10.8  |
|      | 여성     | 59.7 | 32.0 | 8.2   |
| 연령   | 20대    | 44.6 | 38.1 | 17.3  |
|      | 30대    | 55.9 | 34.1 | 10.0  |
|      | 40대    | 54.5 | 38.4 | 7.1   |
|      | 50대    | 59.6 | 33.2 | 7.2   |
|      | 60대 이상 | 66.3 | 27.6 | 6.1   |
| 거주지  | 도심권역   | 57.1 | 34.7 | 8.2   |
|      | 동북권역   | 56.3 | 35.4 | 8.2   |
|      | 동남권역   | 54.5 | 37.1 | 8.4   |
|      | 서북권역   | 57.8 | 31.1 | 11.1  |
|      | 서남권역   | 56.8 | 34.0 | 9.2   |
| 수입   | 하      | 49.5 | 36.1 | 14.4  |
|      | 중하     | 46.4 | 40.6 | 13.0  |
|      | 중상     | 57.0 | 34.7 | 8.3   |
|      | 상      | 50.9 | 39.4 | 9.7   |
| 학력   | 고졸이하   | 47.0 | 41.0 | 12.0  |
|      | 대졸     | 57.8 | 32.6 | 9.6   |
|      | 대학원이상  | 57.4 | 36.5 | 6.1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62.7 | 30.4 | 6.9   |
|      | 단체 미참여 | 48.4 | 39.1 | 12.5  |

가정에서 민주주의 실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실천한다는 비율이 높다. 반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아진다. 수입과 관련해서도 수입이 높아질수록 실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실천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남성, 20대, 수입이 낮은 계층, 고졸이하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젊은 계층과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 시민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6〉 사회 경제적 배경과 직장에서 민주주의 실천

| 구분   |        | 실천함  | 보통   | 실천 않음 |
|------|--------|------|------|-------|
| 성별   | 남성     | 46.4 | 37.6 | 16.0  |
|      | 여성     | 48.1 | 36.5 | 15.4  |
| 연령   | 20대    | 36.1 | 40.6 | 23.3  |
|      | 30대    | 52.6 | 29.9 | 17.5  |
|      | 40대    | 49.1 | 37.9 | 12.9  |
|      | 50대    | 51.5 | 37.4 | 11.1  |
|      | 60대 이상 | 50.8 | 36.5 | 12.7  |
| 거주지  | 도심권역   | 57.1 | 18.4 | 24.5  |
|      | 동북권역   | 48.9 | 37.0 | 14.0  |
|      | 동남권역   | 46.1 | 37.6 | 16.3  |
|      | 서북권역   | 42.4 | 16.7 | 11.1  |
|      | 서남권역   | 49.2 | 36.6 | 14.2  |
| 수입   | 수입 하   | 39.2 | 38.1 | 22.7  |
|      | 수입 중하  | 42.2 | 38.5 | 19.3  |
|      | 수입 중상  | 49.7 | 37.3 | 13.0  |
|      | 수입 상   | 41.2 | 41.8 | 17.0  |
| 학력   | 고졸 이하  | 36.1 | 45.2 | 18.7  |
|      | 대졸     | 50.2 | 34.8 | 15.0  |
|      | 대학원 이상 | 51.4 | 35.1 | 13.5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52.0 | 33.5 | 14.5  |
|      | 단체 미참여 | 43.6 | 40.0 | 16.4  |

직장에서도 여성들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나고, 실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입과 관련해 살펴보면 수입이 낮은 사람일수록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실천 비율이 낮고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실천 비율이 낮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다. 단체 참여 유무에 주목해보면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직장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7〉 사회 경제적 배경과 학교에서 민주주의 실천

| 구분   |        | 실천함  | 보통   | 실천 않음 |
|------|--------|------|------|-------|
| 성별   | 남성     | 40.8 | 42.8 | 16.4  |
|      | 여성     | 45.1 | 41.6 | 13.3  |
| 연령   | 20대    | 43.1 | 32.7 | 24.3  |
|      | 30대    | 40.3 | 47.4 | 12.3  |
|      | 40대    | 43.3 | 44.2 | 12.5  |
|      | 50대    | 46.0 | 41.3 | 12.8  |
|      | 60대 이상 | 42.0 | 45.3 | 12.7  |
| 거주지  | 도심권역   | 34.7 | 46.9 | 18.4  |
|      | 동북권역   | 42.6 | 43.1 | 14.3  |
|      | 동남권역   | 41.0 | 42.7 | 16.3  |
|      | 서북권역   | 51.1 | 35.6 | 13.3  |
|      | 서남권역   | 47.5 | 38.6 | 13.9  |
| 수입   | 수입 하   | 33.0 | 42.3 | 24.7  |
|      | 수입 중하  | 37.5 | 46.9 | 15.6  |
|      | 수입 중상  | 42.7 | 44.7 | 12.7  |
|      | 수입 상   | 42.4 | 42.4 | 15.2  |
| 학력   | 고졸 이하  | 34.3 | 47.0 | 18.7  |
|      | 대졸     | 44.5 | 41.7 | 13.8  |
|      | 대학원 이상 | 45.7 | 39.2 | 15.5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46.9 | 41.4 | 11.7  |
|      | 단체 미참여 | 38.5 | 43.0 | 18.4  |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연령에 주목해보면 20대가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20대가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입에서 보면 역시 수입이 낮은 계층일수록 실천 비율이 낮고 실천하고 있지 않은 비

율이 높게 나타난다. 학력도 마찬가지로 학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민주주의 실천하는 비율이 낮고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보면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실천비율이 높다.

〈표 18〉 사회 경제적 배경과 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 실천

| 구분   |        | 실천함  | 보통   | 실천 않음 |
|------|--------|------|------|-------|
| 성별   | 남성     | 41.6 | 41.0 | 17.3  |
|      | 여성     | 46.5 | 38.3 | 15.2  |
| 연령   | 20대    | 40.1 | 41.1 | 18.8  |
|      | 30대    | 45.5 | 40.8 | 13.7  |
|      | 40대    | 42.0 | 42.4 | 15.6  |
|      | 50대    | 52.8 | 32.8 | 14.5  |
|      | 60대 이상 | 52.5 | 34.3 | 13.3  |
| 거주지  | 도심권역   | 42.9 | 36.7 | 20.4  |
|      | 동북권역   | 43.7 | 42.9 | 13.5  |
|      | 동남권역   | 55.1 | 29.8 | 15.2  |
|      | 서북권역   | 46.7 | 46.7 | 6.7   |
|      | 서남권역   | 48.2 | 36.0 | 15.8  |
| 수입   | 수입 하   | 41.2 | 32.0 | 26.8  |
|      | 수입 중하  | 42.2 | 41.7 | 16.1  |
|      | 수입 중상  | 49.0 | 35.7 | 15.3  |
|      | 수입 상   | 43.6 | 43.0 | 13.3  |
| 학력   | 고졸 이하  | 48.8 | 31.9 | 19.3  |
|      | 대졸     | 45.6 | 39.8 | 14.7  |
|      | 대학원 이상 | 48.6 | 37.8 | 13.5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51.3 | 35.9 | 12.7  |
|      | 단체 미참여 | 41.0 | 41.0 | 18.0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실천하는 비율이 낮다. 20대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에서는 고졸이하 계층이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다. 수입이 낮을수록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높다.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일수록 실천 비율이 높다.

〈표 19〉 사회 경제적 배경과 서울시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 실천

| 구분   |        | 실천함  | 보통   | 실천 않음 |
|------|--------|------|------|-------|
| 성별   | 남성     | 40.8 | 40.7 | 18.5  |
|      | 여성     | 46.7 | 37.0 | 16.2  |
| 연령   | 20대    | 41.6 | 39.6 | 18.8  |
|      | 30대    | 42.7 | 43.6 | 13.7  |
|      | 40대    | 50.0 | 37.1 | 12.9  |
|      | 50대    | 48.5 | 34.0 | 17.4  |
|      | 60대 이상 | 50.8 | 30.4 | 18.8  |
| 거주지  | 도심권역   | 32.7 | 51.0 | 16.3  |
|      | 동북권역   | 47.1 | 37.6 | 15.3  |
|      | 동남권역   | 51.1 | 32.0 | 16.9  |
|      | 서북권역   | 46.7 | 40.0 | 13.3  |
|      | 서남권역   | 46.9 | 36.0 | 17.2  |
| 수입   | 수입 하   | 44.3 | 35.1 | 20.6  |
|      | 수입 중하  | 36.5 | 43.2 | 20.3  |
|      | 수입 중상  | 51.3 | 34.3 | 14.3  |
|      | 수입 상   | 44.2 | 40.0 | 15.8  |
| 학력   | 고졸 이하  | 53.0 | 30.1 | 16.9  |
|      | 대졸     | 45.9 | 38.2 | 16.0  |
|      | 대학원 이상 | 43.9 | 39.2 | 16.9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51.5 | 33.8 | 14.7  |
|      | 단체 미참여 | 41.2 | 40.8 | 18.0  |

서울시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계층의 특징을 보면 남성이 낮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아진다. 거주지역과 관련하여 동남권역이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도심권역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차이가 19.6%인 점을 고려하면 도심권역에 대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이 낮을수록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높고 학력에 주목해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다.



〈표 20〉 사회 경제적 배경과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실천

| 구분   |        | 실천함  | 보통   | 실천 않음 |
|------|--------|------|------|-------|
| 성별   | 남성     | 42.4 | 33.9 | 23.7  |
|      | 여성     | 46.2 | 33.0 | 20.8  |
| 연령   | 20대    | 40.1 | 38.1 | 21.8  |
|      | 30대    | 53.1 | 30.8 | 16.1  |
|      | 40대    | 46.4 | 32.6 | 21.0  |
|      | 50대    | 45.5 | 34.5 | 20.0  |
|      | 60대 이상 | 45.9 | 28.2 | 26.0  |
| 거주지  | 도심권역   | 28.6 | 46.9 | 24.5  |
|      | 동북권역   | 47.9 | 34.1 | 18.0  |
|      | 동남권역   | 47.8 | 29.8 | 22.5  |
|      | 서북권역   | 48.9 | 35.6 | 15.6  |
|      | 서남권역   | 47.7 | 30.7 | 21.8  |
| 수입   | 하      | 42.3 | 32.0 | 25.8  |
|      | 중하     | 38.0 | 38.5 | 23.4  |
|      | 중상     | 52.0 | 28.3 | 19.7  |
|      | 상      | 46.1 | 33.3 | 20.6  |
| 학력   | 고졸이하   | 49.4 | 28.9 | 21.7  |
|      | 대졸     | 45.6 | 33.0 | 21.4  |
|      | 대학원이상  | 45.9 | 37.2 | 16.9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49.7 | 32.4 | 17.9  |
|      | 단체 미참여 | 42.4 | 33.6 | 24.2  |

남성의 비율이 낮다. 20대의 비율이 낮으며 60대 이상 고연령층이 실천하고 있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입과 학력을 살펴보면 수입이 낮은 사람과 학력이 낮은 계층에서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21〉 사회 경제적 배경과 세계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 실천

| 구분   |        | 실천함  | 보통   | 실천 않음 |
|------|--------|------|------|-------|
| 성별   | 남성     | 31.2 | 48.7 | 20.0  |
|      | 여성     | 39.1 | 47.2 | 13.7  |
| 연령   | 20대    | 32.2 | 46.5 | 21.3  |
|      | 30대    | 33.6 | 49.3 | 17.1  |
|      | 40대    | 35.7 | 50.9 | 13.4  |
|      | 50대    | 37.0 | 48.1 | 14.9  |
|      | 60대 이상 | 37.6 | 44.2 | 18.2  |
| 거주지  | 도심권역   | 26.5 | 55.1 | 18.4  |
|      | 동북권역   | 37.8 | 45.8 | 16.4  |
|      | 동남권역   | 37.1 | 47.2 | 15.7  |
|      | 서북권역   | 31.1 | 51.1 | 17.8  |
|      | 서남권역   | 33.7 | 47.9 | 18.5  |
| 수입   | 수입 하   | 28.9 | 44.3 | 26.8  |
|      | 수입 중하  | 23.4 | 55.7 | 20.8  |
|      | 수입 중상  | 40.7 | 44.3 | 15.0  |
|      | 수입 상   | 35.2 | 46.1 | 18.8  |
| 학력   | 고졸 이하  | 38.6 | 41.6 | 19.9  |
|      | 대졸     | 34.2 | 49.4 | 16.4  |
|      | 대학원 이상 | 36.5 | 48.0 | 15.5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38.1 | 48.0 | 14.0  |
|      | 단체 미참여 | 32.0 | 48.0 | 20.1  |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에서는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글로벌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수입과 학력에서 보면 수입과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높다.

단체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사회단체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재삼 요구 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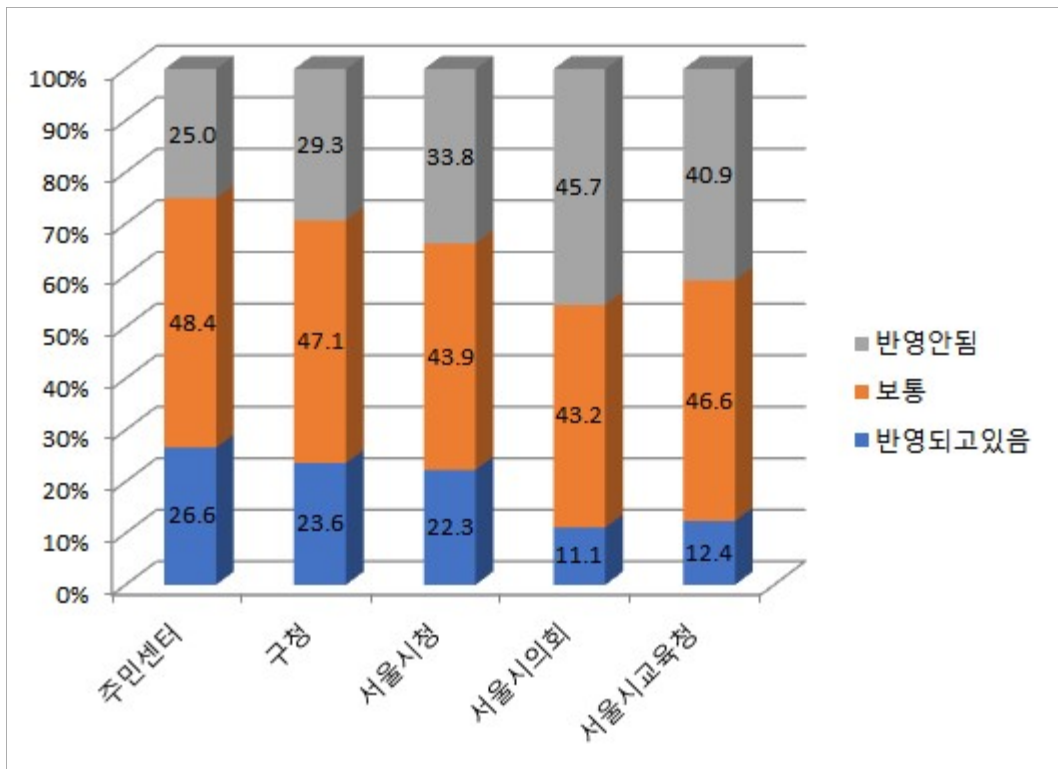
## 12) 주민의견 반영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시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주민참여와 주민의견이 반영은 「정치적 유효성」 감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자신의 의견이 행정과정에 반영된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정치참여나 행정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기에서 다루는 민주시민교육 참여와도 연관성이 클 것으로 본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민들은 자신의 생활과 가까운 행정기관일수록 주민참여와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영되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주민 센터 26.6%, 구청 23.6%, 서울시청 22.8%, 서울시 의회 11.1%, 서울시 교육청 12.4% 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주민참여와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대체로 높다. 예외적으로 주민 센터만이 반영되고 있다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후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은 이러한 행정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참여와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보다 민주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그림 17〉 서울시 의시결정에서 주민의견반영에 대한 인식



〈표 22〉 사회 경제적 배경과 주민 센터 의견반영 정도

| 구분   |        | 반영   | 보통   | 반영 안됨 |
|------|--------|------|------|-------|
| 성별   | 남성     | 27.4 | 47.2 | 25.4  |
|      | 여성     | 25.8 | 49.6 | 24.5  |
| 연령   | 20대    | 23.3 | 51.5 | 25.2  |
|      | 30대    | 28.0 | 52.6 | 19.4  |
|      | 40대    | 22.8 | 50.4 | 26.8  |
|      | 50대    | 30.6 | 41.3 | 28.1  |
|      | 60대 이상 | 28.2 | 47.0 | 24.9  |
| 거주지  | 도심권역   | 22.4 | 44.9 | 32.7  |
|      | 동북권역   | 30.4 | 46.0 | 23.5  |
|      | 동남권역   | 28.7 | 41.6 | 29.8  |
|      | 서북권역   | 33.3 | 44.4 | 22.2  |
|      | 서남권역   | 22.4 | 53.5 | 24.1  |
| 수입   | 하      | 30.9 | 40.2 | 28.9  |
|      | 중하     | 17.7 | 56.3 | 26.0  |
|      | 중상     | 26.7 | 50.7 | 22.7  |
|      | 상      | 26.7 | 49.1 | 24.2  |
| 학력   | 고졸이하   | 25.9 | 52.4 | 21.7  |
|      | 대졸     | 26.7 | 48.8 | 24.5  |
|      | 대학원이상  | 27.0 | 41.9 | 31.1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28.3 | 45.3 | 26.4  |
|      | 단체 미참여 | 24.6 | 52.0 | 23.4  |

주민센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50대 이상 고 연령층에서는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젊음 연령층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수입과 관련하여서도 수입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

〈표 23〉 사회 경제적 배경과 구청 의견반영 정도

| 구분   |        | 반영   | 보통   | 반영 안됨 |
|------|--------|------|------|-------|
| 성별   | 남성     | 24.7 | 44.7 | 30.6  |
|      | 여성     | 20.5 | 49.4 | 28.1  |
| 연령   | 20대    | 21.3 | 50.0 | 28.7  |
|      | 30대    | 23.7 | 50.2 | 26.1  |
|      | 40대    | 22.3 | 47.8 | 29.9  |
|      | 50대    | 25.1 | 42.1 | 32.8  |
|      | 60대 이상 | 25.4 | 45.9 | 28.7  |
| 거주지  | 도심권역   | 20.4 | 42.9 | 36.7  |
|      | 동북권역   | 28.6 | 44.7 | 26.7  |
|      | 동남권역   | 23.0 | 43.8 | 33.1  |
|      | 서북권역   | 17.8 | 51.1 | 31.1  |
|      | 서남권역   | 20.5 | 52.8 | 27.7  |
| 수입   | 하      | 24.7 | 45.4 | 29.9  |
|      | 중하     | 17.2 | 53.1 | 29.7  |
|      | 중상     | 25.0 | 46.3 | 28.7  |
|      | 상      | 23.0 | 43.6 | 33.3  |
| 학력   | 고졸이하   | 26.5 | 49.4 | 24.1  |
|      | 대졸     | 23.3 | 47.2 | 29.5  |
|      | 대학원이상  | 21.6 | 43.9 | 34.5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24.4 | 45.3 | 30.3  |
|      | 단체 미참여 | 22.5 | 49.2 | 28.3  |

구청의 의사결정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특징은 젊은 연령층에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동시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과 관련하여 특히 도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학력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단체 활동유무와 관련해서는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단체와 연계한 정보제공 및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24〉 사회 경제적 배경과 시청 의견반영 정도

| 구분   |        | 반영   | 보통   | 반영 안됨 |
|------|--------|------|------|-------|
| 성별   | 남성     | 22.5 | 42.2 | 35.9  |
|      | 여성     | 22.1 | 45.5 | 32.4  |
| 연령   | 20대    | 21.3 | 43.1 | 35.6  |
|      | 30대    | 21.8 | 46.9 | 31.3  |
|      | 40대    | 21.9 | 47.3 | 30.8  |
|      | 50대    | 24.7 | 40.4 | 34.9  |
|      | 60대 이상 | 21.5 | 41.4 | 37.0  |
| 거주지  | 도심권역   | 16.3 | 44.9 | 38.8  |
|      | 동북권역   | 24.1 | 43.4 | 32.5  |
|      | 동남권역   | 23.0 | 36.0 | 41.0  |
|      | 서북권역   | 22.2 | 44.4 | 33.3  |
|      | 서남권역   | 22.1 | 46.5 | 31.4  |
| 수입   | 하      | 26.8 | 36.1 | 37.1  |
|      | 중하     | 17.7 | 46.4 | 35.9  |
|      | 중상     | 22.0 | 47.0 | 31.0  |
|      | 상      | 20.6 | 44.2 | 35.2  |
| 학력   | 고졸이하   | 30.1 | 42.2 | 27.7  |
|      | 대졸     | 20.2 | 45.5 | 34.4  |
|      | 대학원이상  | 24.3 | 37.8 | 37.8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23.5 | 42.3 | 34.2  |
|      | 단체 미참여 | 20.9 | 45.7 | 33.4  |

서울시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계층을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젊은 층과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동시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입측면에서도 수입이 낮은 사람과 수입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동시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과 관련하여 학력이 높아질수록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연령과 수입 측면에서 양극화에 주목하여 서울시의 행정정보 제공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25〉 사회 경제적 배경과 시의회 의견반영 정도

| 구분   |        | 반영   | 보통   | 반영 안됨 |
|------|--------|------|------|-------|
| 성별   | 남성     | 11.9 | 41.0 | 47.0  |
|      | 여성     | 10.3 | 45.3 | 44.4  |
| 연령   | 20대    | 11.9 | 43.6 | 44.4  |
|      | 30대    | 16.1 | 40.3 | 43.6  |
|      | 40대    | 8.5  | 49.1 | 42.4  |
|      | 50대    | 8.9  | 43.4 | 47.7  |
|      | 60대 이상 | 10.5 | 38.7 | 50.8  |
| 거주지  | 도심권역   | 8.2  | 42.9 | 49.0  |
|      | 동북권역   | 13.8 | 40.5 | 45.8  |
|      | 동남권역   | 14.0 | 34.8 | 51.1  |
|      | 서북권역   | 11.1 | 42.2 | 46.7  |
|      | 서남권역   | 7.6  | 50.5 | 41.9  |
| 수입   | 하      | 13.4 | 40.2 | 46.4  |
|      | 중하     | 6.3  | 47.9 | 45.8  |
|      | 중상     | 12.3 | 45.7 | 42.0  |
|      | 상      | 10.3 | 40.0 | 49.7  |
| 학력   | 고졸이하   | 15.1 | 44.6 | 40.4  |
|      | 대졸     | 9.7  | 44.4 | 46.0  |
|      | 대학원이상  | 13.5 | 36.5 | 50.0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11.9 | 41.1 | 47.1  |
|      | 단체 미참여 | 10.2 | 45.7 | 44.1  |

서울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계층을 살펴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고연령층일수록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권역별로 보면 도심권역과 동남권역 지역이 의견반영 측면에서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입과 관련해서는 양극화 현상이 보인다. 수입이 낮은 계층과 수입이 높은 계층 역시 자신들의 의견이 수용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서울시 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정보에 대한 요구도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13) 자신의 민주주의 역량 평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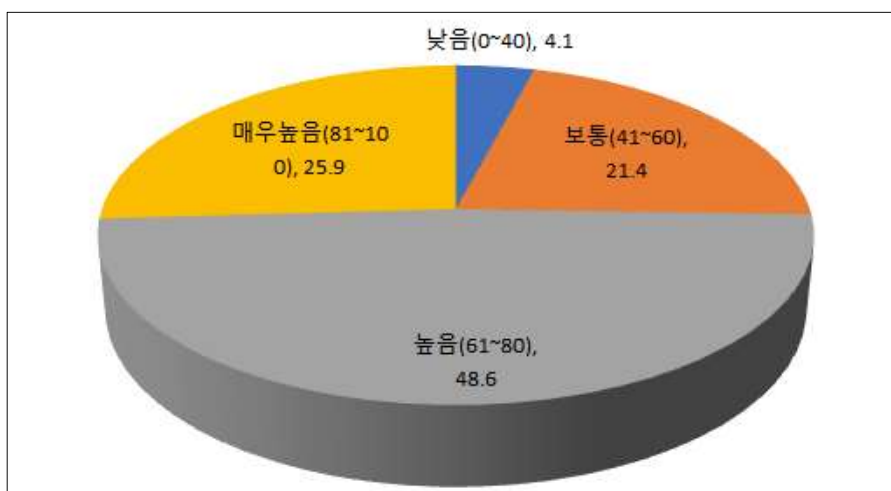
서울시민 스스로가 평가하는 자신의 민주주의 점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민 민주주의 자기평가 점수 평균은 72.89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20대~40대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것에 반해 50대 이상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민주주의 자기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점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이 20대~40대를 중점 대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측면에서는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민주주의 자기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높은 민주주의 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지수는 《이코노미스트》지가 167개국의 민주주의의 상태를 조사하여 작성한 지수이다. 이코노미스트 정보 분석 기구에서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한 지수와 함께 수량화하였다. 각 나라들은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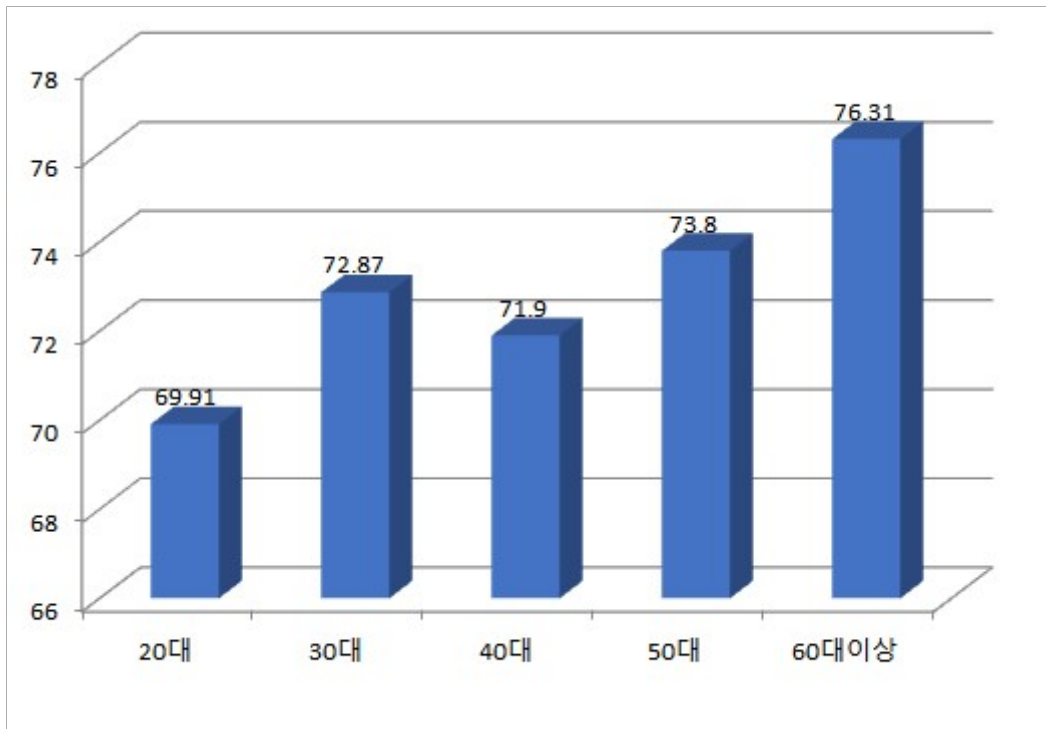
2019년 이코노미스트 정보 분석기구의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조사국 중 노르웨이가 10점 만점에 9.8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0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대한민국은 2019년 8.00점으로 23위를 기록해 아시아 지역에선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림 18〉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역량 평가 점수





〈그림 19〉 연령별민주주의 자기평가 점수 평균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특징적인 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민주주의 역량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민주주의 역량 평가가 전적으로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지 그렇게 생각만하고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다.

이 민주주의 지수를 100점으로 환산해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점수의 평균이 80점인 것을 보면 서울시민들의 자기평가 점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자기평가 점수 평균이 72.89인 것은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스스로의 민주주의 점수를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향후에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민주주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26〉 사회 경제적 배경과 민주주의 역량 평가

| 구분   |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
| 성별   | 남성     | 3.5  | 21.6 | 46.6 | 28.3  |
|      | 여성     | 4.7  | 21.2 | 50.6 | 23.6  |
| 연령   | 20대    | 3.5  | 27.7 | 53.0 | 15.8  |
|      | 30대    | 4.7  | 20.4 | 50.2 | 24.6  |
|      | 40대    | 4.0  | 23.7 | 50.9 | 21.4  |
|      | 50대    | 5.1  | 19.1 | 43.4 | 32.3  |
|      | 60대 이상 | 2.8  | 15.5 | 45.9 | 35.9  |
| 거주지  | 도심권역   | 0.0  | 24.5 | 49.0 | 26.5  |
|      | 동북권역   | 5.0  | 22.5 | 46.3 | 26.2  |
|      | 동남권역   | 3.9  | 19.1 | 47.2 | 29.8  |
|      | 서북권역   | 2.2  | 20.0 | 57.8 | 20.0  |
|      | 서남권역   | 3.6  | 19.5 | 51.8 | 25.1  |
| 수입   | 하      | 10.3 | 23.7 | 41.2 | 24.7  |
|      | 중하     | 2.6  | 30.2 | 48.4 | 18.8  |
|      | 중상     | 4.3  | 17.3 | 49.7 | 28.7  |
|      | 상      | 2.4  | 23.0 | 53.3 | 21.2  |
| 학력   | 고졸이하   | 4.2  | 26.5 | 47.6 | 21.7  |
|      | 대졸     | 4.1  | 21.1 | 49.1 | 25.7  |
|      | 대학원이상  | 4.1  | 16.9 | 47.3 | 31.8  |
| 단체유무 | 단체 참여  | 3.0  | 17.7 | 49.2 | 30.1  |
|      | 단체 미참여 | 5.3  | 25.6 | 48.0 | 21.1  |

민주주의 점수 자기평가와 관련해서는 고연령층에서 스스로 민주주의 점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보다 민주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에 특성화가 요구된다.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이 가장 낮은 계층에서도 민주주의 자기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단체 참여 유무와 관련하여 볼 때 단체에 참여활동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민주주의 자기평가 점수가 높다. 그러므로 단체와 연계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 발제 2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쟁점과 과제

이로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전임대우교수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심층 면담 개요
- III. 민주시민교육의 쟁점
- IV. 시사점(향후 과제)



## I. 들어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 ○ 서울시,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 1천만 인구의 메트로폴리탄 도시
- 민주주의 서울, '시민이 시장이다'
- 제도로서 민주주의 → 생활 방식으로서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제 구성원이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 II. 심층 면담 개요

### II. 심층 면담 개요

#### ○ 목적

-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파악
- 민주시민교육의 쟁점
- 민주시민교육 지원 정책의 방향

#### ○ 대상

- 서울시 자문위원: 민주시민교육의 핵심가치
- 프로그램 개발/운영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
- 학계 전문가: 서울 민주시민교육의 가치, 진단, 지향
- 일반 시민: 생활 속 민주주의 현황, 과제

## II. 심층 면담 개요

### ○ 실시

- 시기: 2020. 6~9월
- 인원: 총 20명

### ○ 분석 절차

면담 내용의 담화에서 주제어 도출 후 개방형 코딩

- 메타분석
- 이론적 주제 중심 코딩
- 결과 도출

7

## II. 심층 면담 개요

### ○ 내용

#### - 서울시 시민 민주주의 현황

: 서울의 과제, 이슈,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역할

: 서울 시민의 민주시민의식 인식 현황

####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평가

: 프로그램 평가, 참여 경험,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

####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참여, 실천방안, 프로그램 제안

####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

: 제도화, 협력체계 구축 방안, 중장기 방안

8





### Ⅲ. 민주시민교육의 쟁점과 과제

### Ⅲ. 민주시민 교육의 쟁점과 과제

#### 1.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 (1) 무관심, 일상에서 유리된 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런 걸 서울시에서 하나요?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서 스스로 소시민이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경쟁사회에서 그런 생각하기에도 바쁘고 당장 일상에 빠져있어서 생각해 본 적이...(중략) 내가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은 이상에 민주주의 개념은 그저 좋은 것이라는 피상적인 생각만 드네요.

- 40대 여성, 학원강사

아무래도 민주시민교육? 민주화 운동 세력이 추진하는 교육이나, 특정 정당에서 추진하는 교육처럼 들리는 게 사실이다. 서울시에서 그런 걸 지원하는지도 몰랐다

- 20대 남성, 대학원생

### Ⅲ. 민주시민 교육의 쟁점과 과제

#### 1.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 (2) 민주시민교육의 낮은 위상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 역사를 보면 공모사업이나 교육 아카데미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실제 나타나는 것은 한시적 사업성격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보편교육으로서 위치를 잡는 것이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 50대 여성, 민주시민교육 운영자

11

### Ⅲ. 민주시민 교육의 쟁점과 과제

#### 1.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 (3)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인식

1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시에는 점점 계층 분화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소외계층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개발과 보존, 부동산 건설 및 도시 재생 관련 첨예한 갈등도 크고... 예를 들어, 근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자, 공공주택이 대거 들어설 마포구 등에서는 주민들 만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시민사회는 코로나 경제 위기만이 아니라, 정보와 의료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와 소통, 지원 방안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민주시민교육도 이런 변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 40대 여성, 민주시민교육 운영자

12



### Ⅲ. 민주시민 교육의 쟁점과 과제

#### 1.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 (4)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한계, 변화 필요성

공동체가 점점 달라지고 위태로워지는데, 민주시민교육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없어요. 인권, 다양성, 참여 등 초점이 자치나 숙의, 주체로 들어오는데 큰 틀에서는 사회를 비판하는 능력과 시민으로 참여하는 능력 등이 모두 배양되어야 하거든요. 이제는 참여, 자치, 협치, 공론화가 핵심 가치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50대 남성, 서울시 자문위원

13

### Ⅲ. 민주시민 교육의 쟁점과 과제

#### 2.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특징, 쟁점

##### (1) 방법적 측면의 변화 절실

관심이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같은 프로그램 찾아서 들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실망했어요. 전달식으로 강의하고 강사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업 진행하니 흥미가 떨어졌어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생각하는 건 매우 지루하고 고리타분하다 라는 생각이예요. 딱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유익하고 즐거운 콘텐츠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 20대 여성, 사무직

제일 어려웠던 게,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싫어하고 지루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일단 참여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대부분 시민들은 일상에서 엄청 바쁘고 정신없는데 오는 사람들이 정말 재미없거나 지루하면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 30대 남성, 민주시민교육 운영자

14



## Ⅲ. 민주시민 교육의 쟁점과 과제

### 2.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특징, 쟁점

#### (2) 내용적 측면의 심화+확대 필요

최근에는 공공부문 채용 등 이사진에 여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정치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시민교육이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를 알려주면 좋겠고, 갈등해결을 위한 교육과 체험학습 같은 것도 담았으면 좋겠어요.

- 20대 여성 사무직

청년들은 진로, 주거, 취업 등 생활 속에 맞닿아 있다는 걸 알고 싶어하고 이런 실생활에 적합한 시민교육 내용을 필요로 하는데, 민주시민교육에서 이런 토론 같은거를 많이 넣어서, 소통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거 같습니다.

- 30대 남성, 민주시민교육 운영자

15

## Ⅲ. 민주시민 교육의 쟁점과 과제

### 3.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 (1) 거대 담론에서 일상 생활의 학습으로

미시적 공간에서 권리와 책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설득과 토론을 통해서 민주주의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이 잘못되어 왔다고 봅니다. 거대담론으로 정부 비판하고 그런 접근만 했는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삶속에서 시민들이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삶 속에서 학습하고 경험해서 배우려면 직장생활에서도 끈대문화 이런 걸 개선하고, 택배 이용하는 태도, 경비원에 대한 에티켓 등,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지는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 50대 남성, 학계 전문가(교수)

16



## Ⅲ. 민주시민 교육의 쟁점과 과제

### 3.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 (2)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 타진

코로나 시대 온라인 콘텐츠를 세련된 방식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참여 유도를 자연스럽게 견인하는 토양이 커져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즉 풀뿌리 단계에서 올라와서 만개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간 중심을 잡던 중간 조직과 정통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문턱을 낮추어 유익한 내용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 40대 여성, 서울시 자문위원

17

## Ⅲ. 민주시민 교육의 쟁점과 과제

### 3.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 (3) 삶, 실생활 연계형 프로그램 활성화

시민단체, 운동 경험자가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목할 사례 중 하나로 씨앗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몇몇 사람의 조직화를 지원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기획서 쓰는 법을 서로 공유했는데 2-3년 사이에 모범사례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열린 형태로 가야 할 거 같습니다.

- 40대 남성, 민주시민교육 운영자

18



## IV. 시사점

### IV. 시사점

####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시민의 역할, 위상 변화  
→ 단순 교육참여를 넘어 실천의 “주체”로
- 시민의 일상과 민주주의의 연계  
→ 갈등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  
→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성찰



## IV. 시사점(향후 과제)

###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 - 방법, 형식의 대전환

- 시민의 전 생애주기를 통한 시민성 함양
- 생활 속 삶의 이슈의 공론장, '숙의민주주의'
- 온/오프라인 참여기반 지원
- 평생교육 등 다른 부분과 연계
- 적극적인 행정지원: 민주시민교육원 등

21

## IV. 시사점

### ○ 서울시의 시민역량 제고를 위한 제언

#### - 공동체에 대한 인식 전환

→ 정치적, 이념적 관점의 민주시민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안전과 성장, 시민공동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

####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

→ 내 삶에 유익한 시민교육, 서울시라는 공동체 속에서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시민의식 실천성 강화

#### - 서울시의 사회적 신뢰 자본 확충

→ 공존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과 학습, 일상의 실천

22

## IV. 시사점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전달체계 유연화

- 공급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적 시선

→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행정관료적 시민교육이 아닌, 정교한 지원 체제 필요

- 서울시 민주시민학습의 우수사례 공유와 홍보

→ 시민들의 심리적, 물리적 접근성(accessibility)을 향상시키는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청년, 중장년층, 여성 등 서울시민의 포용적 참여 증진을 위한 구상 모색

23



감사합니다

## □ 토론 1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발전 방안에 관하여

김범수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제시하신 연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발견된 사실 중에서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응답자 중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비율이 9.1%로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과 양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자의 연구 방향에 동의합니다.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성공을 위해 정책 연구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검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통계분석을 통한 통계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연령별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평균분석 등을 적용하여 통계적 차이를 검증한다면, 연구진의 주장을 지지하는 타당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2. 민주시민교육을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한 연구자 입장이 명확하게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 저자는 “민주시민교육은 행정기관이나 학교에서 진행되는 제도권 교육과는 달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진행하는 민주주의 시민학습이라는 이미지를 정립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라 설명한다.

- 현 시점에 행정기관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해야 하는가? 아니라면, 대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행정기관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추론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가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취지와 연결시켜 볼 때, 시민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전략보다는 시민 스스로가 학습하는 ‘시민학습’이라는 전략에

서 향후 종합계획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 3.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화

- 저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대야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서, 독자들이 그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한 발 더 나아가 일반적 민주시민교육과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 특성을 제시하면, 좀 더 공감의 폭이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의미 있는 개념 설명 : “민주시민교육이란 시민이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 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며,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삶의 향상을 위해 참여하게 하는 제반 교육 및 활동(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 2011)” ; 시민성 교육(가치) + 정치 참여 교육(기술)

### 4.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사, 즉 학습 모임 지원 정책의 구체화

- 설문 중 “서울시의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자발적 학습모임(동아리)을 만들어서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가요?”에 대하여 ‘적극적 참여’ 의사가 33.4%입니다. 보통은 48.9%였습니다. => 학습모임에 대한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어떻습니까.
- 교육의 대상 확대와 함께 교육의 질에 관한 대안 연구: 어떤 교육과 어떤 교육이 흥미와 의미를 높이는가? 에 대한 서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5. 서울시의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교육 체계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교육 정책을 정리하고, 그 특성과 과제를 제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6.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주제 및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온라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64.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참여의사를 묻는 설문에서도 55.1%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 참여 의지에 반응하는 온라인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대안이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 흥미를 가지는 민주시민교육 분야 중 1위는 '사회안정'이었고, 2위는 '민주주의교육'이었습니다. =>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것인가?

8.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요하는 기술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동단위, 구와 시단위에서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교육하고, 참여 제도에 연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개발하면 어떨까 합니다.

9. 민주주의 교육의 내용: 민주주의 지수를 중심으로 온라인 콘텐츠 관련 의견

-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투표참여와 공정 선거와, 정당 경쟁)
- the functioning of government (의회의 기능, 의회와 집행부 관계 등)
- political participation (시민참여의 의미와 정부의 참여 장치 및 제도)
- political culture (종교와 정치의 분리, 군사정부에 대한 평가, 자유 토론과 공존)
- civil liberties (언론, 출판, 집회, 표현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 성평등 등)
- 민주주의 역사(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미국 독립, 남북전쟁, 일제 식민시대, 4.19와 5.16 등, 시민의 탄생과 변화)

10. 오프라인 정치참여 기술 교육

- 참여제도 워크숍: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및 동 주민총회 기획 실무 워크숍
- 토론 워크숍: 예) 공공임대주택 토론, 사회자, 기록자, 발언자, 발표자
- 스마트 워크숍: 공존을 통한 스마트한 정치 공동체, 이견듣기, 결정 수용하기
- 체험 워크숍: 교육생들이 000동 주민총회에 직접 방문하여 참가 느낌을 토의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

=> 교육 모듈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평가 수정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체계 마련: 흥미 + 의미

=> 같은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가 공모형식으로 제작 제공하게 하고, 수강 시민의 수와 평가에 따른 시상하는 방식 검토



## □ 토론 2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토론문

노태훈

전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장

## 1. 민주시민교육이 왜 필요한가?

-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한다.”
- 민주시민교육은 제도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생활 속, 일상 속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음. 민주제도를 구축했음지라도 시민들이 민주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장식물에 불과하게 됨. 시민의식의 고취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전제 조건이 됨.
- 민주시민은 수동적 시민이 아닌 실천적, 능동적, 참여적 시민을 의미함.
-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왜 사회문제 해결에서 시민이 중요한지, 왜 시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만 하는지를 증명하였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제고하도록 만들었음. 특히 촛불혁명은 일반 시민들이 점화시켰다는 점에서, 더불어 일상생활에 녹아든 시민들의 참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계층과 세대의 격차, 지역과 이념 갈등 등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시민들의 참여 부족 등을 볼 때 민주주의의 외형적 발전에 비해 실질적 발전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음.
-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은 사회 속의 주체, 주권자로서의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 “시민은 가족에서부터 학교를 거쳐 성인의 일상적인 삶의 과정 전체에서 시민으로서 교육되고 시민으로 형성되어야 한다.”(장은주, 2017)

=> 이번 연구용역의 방향성

## 2. 민주시민교육은 주제(Agenda)가 아니고 원칙(Principle)이다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함. 협의적으로는 주권자 교육, 정치교육으로부터 광의적으로는 UN의 지속가능발전에서 규정한 가치교육(UN SDGs 4.7)<sup>1)</sup>의 내용을 전부 포괄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시대와 조건에 따라 주제는 달라지지만 ‘시민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모든 교육활동’이 민주시민교육이라 규정해야 함.

○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은 하나의 교육 주제가 아니고,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서 민주시민성을 증진시킬 수 있게 교육과정이 재조정되게 하는 것이 목표여야 함

○ 민주시민교육은 ‘배우기’(평생교육, 의무교육, 가치교육)와 ‘살아가기’(주민자치, 협치, 공익활동, 자원봉사활동)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이번 연구용역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

## 3. 연구용역에 답아야 할 것들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현황조사 및 분석

- 관련 법과 제도: 조례, 정책, 시정운영 방향 및 공약,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 25개 자치구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 평생교육 내 시민참여교육 운영 현황
- 의무교육 현황조사 및 분석

(자치구의 아파트 관리자 교육, 주민자치교육, 통반장교육, 민방위교육, 공무원 대상 교육 등)

○ 서울시에 활용 가능한 인프라 파악

-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 현황
- 도서관 현황(특히 주민참여 교육 운영 현황)
- 자치구의 민주시민교육 인프라 현황

1)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입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목표 4가 ‘교육’ 이고 4,7이 성평등, 차별, 인권, 다문화등과 같은 가치 교육이다.

<http://ncsd.go.kr/api/unsdgs%EA%B5%AD%EB%AC%B8%EB%B3%B8.pdf>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방향 제시
  - 평생교육과의 관계 및 협력 방향
  -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의 연계 방향
  - 의무교육에 민주시민교육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
  - 현재 서울시 의회에 상정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전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의 타당성 여부 등)

### 3. 종합 의견

○ 현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이나 민주시민성 덕목, 지수 등의 연구는 많은 연구 논문과 보고서가 있음. 이를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됨, 연구진이 규정한 개념만 언급해도 충분함. 여러 나온 자료 리스트 정리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가 2014년에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도 현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여야 하고, 특히 위에서 언급한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인프라 파악이 매우 중요함. 현재 17개 광역 시도 중 부산, 대전, 세종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워낙 작은 1천~2천만 원의 용역비로 만들다 보니 이 보고서들이 일반적 방향만 제시되어서 실용성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음. 이번 서울시의 연구용역이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민주시민교육조례와 관련한 유사조례(공익활동관련, 자원봉사 관련, 지속가능발전관련, 사회적 경제 관련, 평생교육,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관련)의 파악과 관련 운영 중간지원 조직과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와의 연계 방향 제시가 필요함.

○ 시민의식 조사는 현황파악에 의미가 있으나 이번 연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사실 서울시가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한 시기가 2015년이고 예산도 연 6억 원(이중 사업비는 4억5천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들의 체감은 매우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임.



## □ 토론 3

# 서울시민의 민주시민 의식 현황과 과제 중간보고서 토론문

이진원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이번 서울시민대상 수요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20년 서울시민대상 조사결과를 보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능하다면 서울시 혹은 유관기관에서 이를 위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 등〉

- 1, 연구방법에 대한 질의;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질의 및 제언
  - 조사 대상의 구성과 서울시 인구 비율의 비교 설명 필요.
  - 서울시 인구 비율(남성 여성, 연령, 학력, 평균수입, 거주지)과 조사 대상의 비율의 비교 설명 필요: 바이어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
- 조사 설문 내용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민주시민교육 인지도 조사,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담당기관, 지역의 단체별 민주시민교육 운영 주체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의 필요성과 상호관계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 예를 들어 민주시민교육 인지도 조사의 답변별로 서울시민주시민교육 담당기관, 지역의 단체별 민주시민교육 운영 주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상호 관계의 결과가 있다면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 2. 조사 결과의 보완에 대한 제안

- 개념의 통일성 추가 설명 필요
- 민주시민교육담당기관: 서울시 기관, 시민단체, 학교 및 교육기관, 동아리
-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민간단체, 시민단체)

## 3. 분석 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 제안

- 설문조사에 수입이 낮은 계층의 평가와 수입이 높은층, 고학력층, 저학력층 등의 설문 조사의 결과와 이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참가도 등을 교차 분석하여 실제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 중점대상의 분류는 ‘학생 및 청년’ ‘성인’ ‘고령층’ ‘사회적 약자’ ‘정치인 공무원’으로 하였는데 분류의 수준을 다르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 예를 들어 ‘학생 및 청년’ ‘고령층’은 나이를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위상, ‘정치인 공무원’은 직업별인데 같은 수준에서 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특히 ‘성인’은 어떤 계층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러한 분류를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주시민교육 우선 추진 분야에 대한 분석에서 단순히 성별 연령별 등으로 나누었는데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주체가 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시민단체인지의 응답별로 구분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추가분석을 제안함: 지원사업을 우선추진 분야에 대한 응답자는 추진주체를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즉 단체유무에 대한 설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제안 이유는 비슷한 조사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개발 콘텐츠제작에 우선 배정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지원 사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 4.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연구보고서에 적극적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에서 서울시 기관, 교육기관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을 고려해 시민단체 보다는 기관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과 그 방법에 대한 제시가 필요. 서울시 등(유관기관 포함)에서 주관하여 적극적



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신뢰감이 높고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

- 시민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 교육 분야와 정보경로, 온라인 교육 참여 의사 등을 교차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즉 시민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 교육 분야에 따라 온라인 교육 참여 의사의 비율이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목적의 명확성에 대한 지적은 매우 적확하다고 봄: 개념과 목적이 정해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함.



## □ 토론 4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권혜진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결 상임연구원

### 1. 민·관의 협업과 상호 보완적 모색

2020년 현재 민관의 협치(거버넌스)의 확장은 2010년 서울시 교육청의 거버넌스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마을교육공동체와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공론장의 확대와 더불어 마을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이전 주민자치위원회)의 전환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 이는 서울시의 정책적 뒷받침과 각 구의 행정 노력이 수반된 결과이지만 서울의 마을만들기, 시민운동의 다변화(풀뿌리 시민운동의 확장)를 위한 시민의 노력이 기반이 되지 않았다면 힘든 과정이다.

### 2.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적 이해

#### 1) 서울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 2014년 말 : 서울시장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자문위원회 구성을 촉구함.
- 2015년 6월 1일 : 정책포럼 - 민주시민교육 변화지형과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 2015년 8월 1일 : 정책포럼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길 찾기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들이 제안하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종합 계획”
- 2015년 10월 13일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라운드 토론
- 2015년 11월 19일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워크숍 추진
  - 합의사항 : 서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민간네트워크 (가칭)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함
- 2016년 2월 3일 : 서울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1차 준비모임
  - 합의사항 : 민주시민포럼팀과 자치구분과를 구성하였고, 2016년 민주시민교육 사업 중 민주시민포럼 및 정책가워크숍을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함.
- 2016년 12월 28일 : 서울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2차 준비모임

- 2017년 2월 15일 : 서울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3차 준비모임
  - 합의사항 : 2017년 민주시민교육센터는 공동협력을 통해 위탁서를 제출하기로 함.
- 2017년 3월 8일 : 제 시민사회 대상 서울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참여 제안 ○ 2017년 3월 15일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1차 발기인 회의
- 2017년 3월 23일 : 서울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민시넷) 창립(총 44개 단체 참여)
- 2017년 4월 21일 : 서울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1차 운영위원회(이후 격월진행)
- 2017년 6월 9일 :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장은주 저자 초청 북토크
- 2017년 7월 11일 : 성장포럼 '서울민주시민교육포럼'1차 개최  
(8.23-2차 포럼/10.14-3차 포럼/12.6-4차 포럼)
- 2017년 7월~11월 : 시민정책가워크숍 개최(4권역별 평균2회)
- 2017년 8월 30일 : 서울민주시민교육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가치)서울민주시민교육원의 독립적 설립을 서울시에 제안하는 방안 중심 토론.
- 2017년 9월 29일 : 서울민주시민교육발전방안 서울시에 제안
- 2017년 11월 7일 : 서울민주시민교육발전방안에 관한 연관기관 면담
- 2018년 1월 31일 : 총회
- 2018년 3월 13일 : 참여단체 회원 대상 2018년 사업계획을 위한 테이블미팅 진행
- 2019년 8~9월 예정 : 전국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위한 서울지역 워크숍

### 서울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현황

- 서울특별시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2014년)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7)
  -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흥사단) 2017년 4월
    - 행정사무 위탁의 성격으로 거버넌스 형태 및 독자적 사업 영역이 아닌 4억 정도의 행정사무 센터
  - 2019년 5월 이후 새로운 지원체계 모색(평생교육과 산하 or 독자적 지원체계 구축)
  -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차원에서 시장 면담을 통한 독자적 지원체계 마련 제안
- ※ 경기의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는 사무위탁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주요 6개 지역에 분소의 형태로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2020년 예산 20억)
- ※ 부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2021년 개설하기로 시와 시의회의 확정단계에 있음(2021년 4억 9천에서 조정하고 있음)

## 2)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노력

- 1997년 9월 민주시민포럼 구성
  -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안 작성, 입법청원 실시
  - 참여단체 : 경실련, 기윤실, 참여연대, 흥사단, 한국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 2004년 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구성
  - 2005년 민주시민교육지원 및 촉진에 관한 법안 마련
  
- 2010년 시민사회, 학계,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 구성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마련
  - 참여단체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선거연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공원, 대전충남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한국YMCA, 흥사단, 경실련,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선거시민모임, 불런티어21, 열린사회시민연합
  
- 2015년(18대 국회) 남인순 의원, 이연주 의원이 “민주시민교육지원법”발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 됨

## 3. 동국대 연구진 발표문에 대한 제언

1) 시사점과 향후 과제 중 시민의 ‘일상(삶)과 민주주의의 연계’, ‘삶, 학습, 참여의 연계’, ‘상향식 거버넌스’, ‘성과 중심에서 과정중심’의 키워드는 전적으로 동의함.

2) 서울시민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인지 여부에서 알고 있음의 응답이 9%에 머물러 있는 지점으로 볼 때 민주시민교육의 확장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주민자치, 공론장 등 협치 사업과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확장을 통해 확장 필요.

3)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이해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정의는 각 개인 또는 단체의 경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현재 전국과 서울의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안에서도 각 지역과 단체,

개인별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가 다른 상황임.(쓰레기 분리수거 등 준법교육에서 정치과정, 저항의 과정, 토론·토의 과정 등 다양한 인식으로 나타남)

- 이는 위 2번의 실천 활동을 통해 공동의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합의될 수 있음.

#### 4) 마무리 :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분담

- 행정지원체계

현재 서울시는 민주주의위원회를 두고 민간 중심의 자문위원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사무위탁의 형태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시민사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상이지만 민주주의위원회는 2020년 시작되었고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시민의 일상의 문제에 다가서는데 한계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는 현장의 단체와 동아리 등 민간의 민주시민교육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과도한 행정과 시의회의 감시 체계에서 자율성보다는 ‘을’의 위치에서 사무 위임 기구의 한계와 턱 없이 부족한 사업 예산(점점 축소되어 지고 있는 실정) 등 점검할 부분이 많다. 서울 NPO지원센터와 경기의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경우처럼 광대한 서울을 커버하기 위해 권역별 중간지원조직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시민사회의 주도성

2015~6년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있어서 서울시가 자격과정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인 바 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의와 경험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라는 공인된 행정기관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다. 각 시민사회 개별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역사성을 통해 내용적으로 인정받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서울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환경, 인권, 여성 등의 가치를 토론의 과정과 시민참여 공론의 과정으로 전개하는 것에 있어 행정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협치 제도에 대한 내용성의 확장

주민자치회 및 공론의 장, 참여예산제 등은 결국 시민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정책에 대한 자발적 참여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민주시민교육이 단순 교육의 과정이 아닌 일상의 실천 과정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확장적 전략이 나오길 기대한다.